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 분석 Ⅲ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 분석 II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총괄

조 의 섭 |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임 명 현 | 추계세제총괄과장

작성

박연서, 차병섭, 최선웅, 최천규

지출추계

김안나, 김윤희, 박연서, 유희수
이은미, 이진우, 차병섭, 최천규

수입추계

강민지, 김세화, 김혜리, 김효경
박지원, 백경엽, 신영임, 채은동
태정림

지원

장유진, 최민경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시리즈는 국회의 「2018회계 연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788-3776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2017. 1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7.10.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429조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67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을 포함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기조절 등 국가경영에 있어서 핵심적 수단으로서 세대를 아울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시계를 갖고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 재정전망은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재정계획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봅니다. 특히 재정 자원은 한정된 가운데 지출 수요는 급증하여 재정압박(Fiscal Pressure)에 처해 있는 국가일수록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재정전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향후 5년간의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의 추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실적과 비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조망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선과 비교를 통하여 추가적인 재정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 계획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5개년 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NABO 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429.4 (25.1)	447.6 (25.0)	471.6 (25.2)	491.4 (25.1)	513.3 (25.0)	4.6
국세수입	260.4 (15.2)	272.1 (15.2)	290.6 (15.5)	303.4 (15.5)	317.7 (15.5)	5.1
국세외수입	169.0 (9.9)	175.5 (9.8)	181.0 (9.7)	188.0 (9.6)	195.6 (9.5)	3.7
-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2.9
- 기금수입	143.5	149.2	154.0	160.3	167.0	3.9
총지출	409.7 (23.9)	431.0 (24.1)	461.7 (24.6)	481.5 (24.5)	509.4 (24.8)	5.6
의무지출	200.7 (11.7)	221.1 (12.4)	243.9 (13.0)	253.4 (12.9)	270.7 (13.2)	7.8
- 복지분야	87.4	96.8	107.2	115.6	126.4	9.7
재량지출	209.0 (12.2)	209.9 (11.7)	217.9 (11.6)	228.0 (11.6)	238.7 (11.6)	3.4

주: ()는 GDP 대비 비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 운용계획 (A)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5.0
	총지출	410.1	429.0	453.3	476.7	500.9	5.8
	통합재정수지	13.0	18.1	18.0	15.3	12.5	
	관리재정수지	-28.9	-28.6	-33.0	-38.4	-44.3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66.9 (38.9)	708.9 (39.6)	749.1 (39.9)	793.0 (40.3)	835.2 (40.4)	5.8
NABO 재정전망 (B)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4.6
	총지출	409.7	431.0	461.7	481.5	509.4	5.1
	통합재정수지	19.7	16.6	9.9	9.9	3.9	
	관리재정수지	-22.0	-28.8	-39.0	-40.8	-48.1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59.9 (38.5)	702.2 (39.3)	748.3 (39.9)	794.6 (40.5)	840.7 (41.0)	6.2
차 이 (A-B)	총수입	-6.3	-0.5	-0.2	0.7	0.3	0.4
	총지출	0.4	-2.0	-8.4	-4.8	-8.5	-0.5
	통합재정수지	-6.7	1.5	8.2	5.4	8.7	
	관리재정수지	-6.9	0.2	5.9	2.4	3.8	
국가채무	6.9	6.7	0.8	-1.6	-5.5	-0.4	

주: 2017년은 추정기준

일 러 두 기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경상GDP를 의미함
2.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경 기준임. 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는 전망치임
3. 2012~2016년 자료들은 결산 기준 자료임
4. 각 표에서 “-”는 “0”을 포함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수를 의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5.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6. 각 표에서 차이(A-B) 중 연평균 증가율에 해당하는 값은 연평균 증가율의 차이를 의미함
7.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 방식을 이용해 산출함
8. 국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것임
9.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됨
10. 아동수당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NABO 전망과의 비교를 위해 의무지출로 재분류함

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개요

1. 재정전망의 의의

-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전망치
 - 정부 정책은 한 번 채택되면 국가재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필요
 - NABO 전망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5년간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의 변화를 추정
- NABO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할 목적
 - (과거 추세와 비교) 장래 예상되는 재정영향을 과거 실적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를 지원
 - (기준선과 비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 수치들을 현행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영향을 파악 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정수치들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향후 5개년 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지원

2. 재정전망 방식

- 총수입과 총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한 후, 5년간의 연도별 소요액을 직접 추계하여 합산하는 방식
 -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전망
 -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구성되며, 국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영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으로 구성
 - 각 세목별 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과세대상자 수, 소득신고율, 소비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한 과거 추이 및 당해연도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망
 -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측정
 -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전망
 -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차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의무지출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경제변수와 출산율, 사망률, 65세 이상 인구 수 등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변수, 각 사업별로 핵심이 되는 추계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
 - 재량지출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정부안을 반영
 -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하여 전망
 - 각각의 재정수지 전망은 직접 추계를 통해 산출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기초로 함
 -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으로 산출
 - 적자성 채무는 전년도의 적자성 채무에 당해연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산출식으로 전망
 - 금융성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정부안 반영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경제변수

- 경상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등 경제변수는 NABO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전망을 사용

▮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전망 ▮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실질GDP성장률	2.9	2.8	2.9	2.8	2.7	2.8
실업률	3.8	3.8	3.6	3.7	3.7	3.7
취업자 수 증가율	1.3	1.2	1.2	1.1	1.1	1.2
경제활동참가율	63.1	63.3	63.4	63.5	63.7	63.4
소비자물가	2.0	1.9	2.1	2.2	2.2	2.1
국고채금리(3년만기)	1.8	2.2	2.5	2.6	2.7	2.4
GDP디플레이터	1.7	1.6	1.9	1.9	1.9	1.8
경상GDP성장률	4.6	4.4	4.8	4.7	4.6	4.6

- 경상GDP성장률은 재정전망 기간(2017~2021년) 평균 4.6% 전망
 - 실질GDP는 재정전망 기간 평균 2.8% 성장할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7~2021년 기간 평균 1.2%(32만여 명)로 지난 2012~2016년 기간 평균 증가율 1.6%(39.8만명)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실업률은 2018년 3.8%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2019년 3.6%로 하락하고 2020~2021년 기간 중에는 3.7%를 기록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와 함께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2021년 63.7%에 이를 전망
- 소비자물가는 세계경기 회복 및 민간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 2017~2021년 기간 평균 2.1% 증가 전망
 - 실질GDP값이 소폭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어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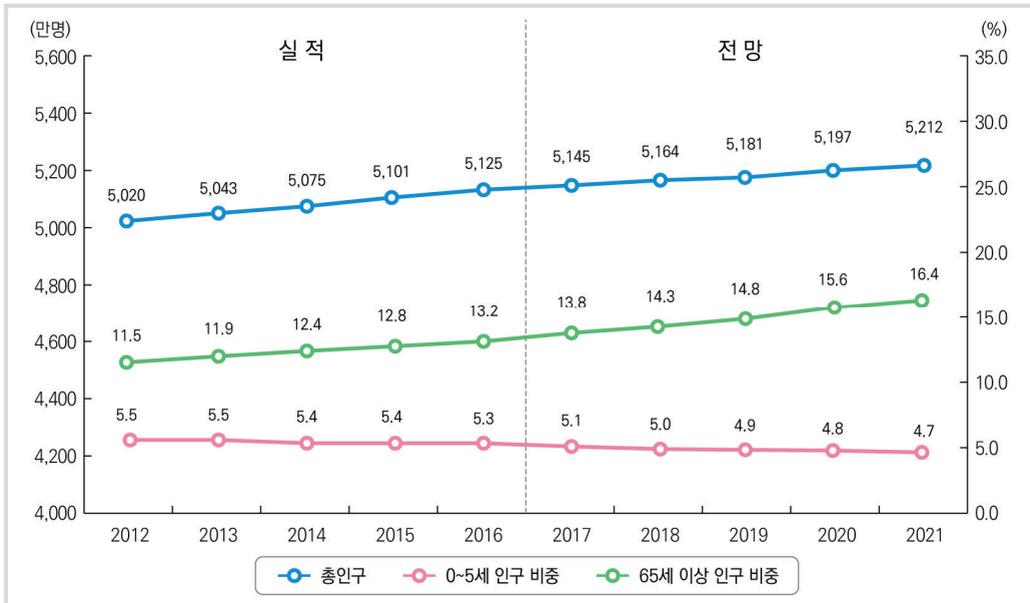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국내 잠재성장률의 완만한 하향세로 경기변동 폭 또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 총수요압력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7~2021년 기간 평균 금리는 2.4%로 전망
- 중기적으로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나. 인구변수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5~2065년 장래인구 추계」 중 2017~2021년 자료에 기초하여 전망

장래인구추계: 2012~2021년



자료: 통계청

- 총 인구 수는 2017년 5,145만명에서 2021년 5,212만명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출생아 수는 2017년 41.3만명에서 2021년 41.0만명으로 연평균 0.2% 감소할 전망
 - 0~5세 인구 수는 2017~2021년 기간 263.9만명(총 인구 대비 5.1%)에서 245.6만명(총 인구 대비 4.7%)으로 연평균 1.8% 감소할 전망
 - 65세 이상 인구 수는 2017년 707.6만명(총 인구 대비 13.8%)에서 2021년 854.4만명(총 인구 대비 16.4%)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전망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 총수입 중 국세수입 전망을 위해 가정한 주요 정책변화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항목
 - 고용증대세제 신설,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식양도소득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
 - 총수입 중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정책변화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확대 또는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상향 조정이 있음
- 총지출 전망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고용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및 보훈 급여 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일수 증가 및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기초연금에서 기준연금액 인상(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아동수당 신규 사업 추진
 - 재량지출은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된다고 보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
 - 다만,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아동수당을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NABO는 국회에 제출된 「아동수당법안」 등의 규정방식을 고려하여 의무지출로 분류

I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결과

1. 총수입

- 총수입은 2017년 429.4조원에서 2021년 513.3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하여 GDP 대비 약 25.1%(5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실적 부진 및 자산시장 정체기를 포함하는 직전 5년(2012~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 4.1%에 비해서는 0.5%p 상회하는 수준
 - 국세수입은 2017년 260.4조원에서 2021년 317.7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세외수입¹⁾은 2017년 169.0조원에서 2021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NABO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29.4 (25.1)	447.6 (25.0)	471.6 (25.2)	491.4 (25.1)	513.3 (25.0)	4.6	4.1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60.4 (15.2)	272.1 (15.2)	290.6 (15.5)	303.4 (15.5)	317.7 (15.5)	5.1	4.5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69.0 (9.9)	175.5 (9.8)	181.0 (9.7)	188.0 (9.6)	195.6 (9.5)	3.7	3.5
• 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25.5 (1.5)	26.3 (1.5)	27.0 (1.4)	27.7 (1.4)	28.6 (1.4)	2.9	-1.8
• 기금수입 (GDP 대비 비율)	143.5 (8.4)	149.2 (8.3)	154.0 (8.2)	160.3 (8.2)	167.0 (8.2)	3.9	4.6
- 사회보장성기금 ¹⁾ (GDP 대비 비율)	80.8 (4.7)	88.2 (4.9)	93.7 (5.0)	99.4 (5.1)	104.7 (5.1)	6.7	4.9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고, 각 기금의 기여금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

1) 국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을 말한다.

- 항목별 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17년 15.2%에서 2019년 이후 15.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세외수입은 2017년 9.9%에서 2021년 9.5%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던 자산시장이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위험 증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보임
 -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기여금 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세법개정안 등 정책변화 시 기준선 대비 약 32.4조원의 재정수입 추가 확보 전망
 -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기준선(4.6%) 대비 0.5%p 증가한 5.1%로 전망되어 기준선 대비 18.6조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
 -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입기반 확대 영향
 - 국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기준선(3.2%) 대비 0.5%p 증가한 3.7%로 전망되어 기준선 대비 13.7조원의 수입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
 - 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율 상향조정 영향

2. 총지출

- 총지출은 2017년 409.7조원에서 2021년 509.4조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하여 과거 5개년(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4.4%)보다 1.2%p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GDP 대비 총지출 비율도 2017년 23.9%에서 2021년 24.8%로 0.9%p 증가할 것으로 전망

「NABO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09.7 (23.9)	431.0 (24.1)	461.7 (24.6)	481.5 (24.5)	509.4 (24.8)	5.6	4.4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00.7 (11.7)	221.1 (12.4)	243.9 (13.0)	253.4 (12.9)	270.7 (13.2)	7.8	5.0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09.0 (12.2)	209.9 (11.7)	217.9 (11.6)	228.0 (11.6)	238.7 (11.6)	3.4	3.9
총지출에 대한 비중, %							
의무지출	49.0	51.3	52.8	52.6	53.1		
재량지출	51.0	48.7	47.2	47.4	46.9		

- 의무지출은 2017년 200.7조원에서 2021년 270.7조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하여 2012~ 2016년간 의무지출 증가율(5.0%)²⁾에 비해 2.8%p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50%를 초과하여 2021년에는 53.1%까지 증가
 -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도 2017년 11.7%에서 2021년 13.2%로 증가 전망
 -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인구 증가 및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규 도입 등으로 복지분야에서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9.7%)이 높게 나타난 결과
- 현행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기준선과 대비하면, 5년간 총 54.9조원의 추가적인 총지출 증가 예상
 - 항목별로는 의무지출에서 40.3조원, 재량지출에서 14.6조원 발생
 - 의무지출 차이는 2018년 이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 확대, 재량지출은 전망 시 가정의 차이(기준선은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반영)에 따름
 - 의무지출에서 기준선과의 차이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아동수당 신규도입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30.2조원)와 지방이전재원 확대(7.4조원) 등에 기인

2)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 산출을 위해 적용한 총지출 및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무지출 산정기준에 따른 결산 금액이며, 이 중 2016년 결산액은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결산액을 단순 합계하여 산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p.171.).

3.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만, 규모는 2017년 19.7조원 (GDP 대비 1.2%)에서 2021년 3.9조원(GDP 대비 0.2%)으로 감소할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가 전망기간 동안 지속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017년 41.7조원(GDP 대비 2.4%) → 2021년 52.0조원 (GDP 대비 2.5%)
 - 다만, 총지출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5.6%)가 총수입(연평균 증가율 4.6%)에 비해 높은 결과,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전망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29.4 (25.1)	447.6 (25.0)	471.6 (25.2)	491.4 (25.1)	513.3 (25.0)	4.6	4.1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09.7 (23.9)	431.0 (24.1)	461.7 (24.6)	481.5 (24.5)	509.4 (24.8)	5.6	4.4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9.7 (1.2)	16.6 (0.9)	9.9 (0.5)	9.9 (0.5)	3.9 (0.2)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GDP 대비 비율)	41.7 (2.4)	45.4 (2.5)	48.8 (2.6)	50.7 (2.6)	52.0 (2.5)	5.7	2.3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22.0 (-1.3)	-28.8 (-1.6)	-39.0 (-2.1)	-40.8 (-2.1)	-48.1 (-2.3)		

- 기준선과 비교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8년 +0.1%p, 2019년 -0.1%p, 2020년 -0.4%p, 2021년 -0.8%p로 매년 격차가 커질 전망
 - 이는 총수입(기준선 대비 연평균 증가율 차이: 0.5%p)보다 총지출(기준선 대비 연평균 증가율 차이: 1.4%p)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기준선 간 격차가 커짐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22.0조원 (GDP 대비 -1.3%)에서 2021년 -48.1조원(GDP 대비 -2.3%)으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할 경우의 수입 감소 규모가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할 경우의 지출 감소 규모보다 크기 때문
 - 기준선과 대비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은 2017년에는 동일하지만 2018년 이후 기준선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2018년 -0.008%p, 2019년 -0.1%p, 2020년 -0.5%p, 2021년 -1.0%p)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7년 41.7조원(GDP 대비 2.4%)에서 2021년 52.0조원(GDP 대비 2.5%)로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연평균 증가율 6.7%)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7.7%)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 규모가 지출보다 약 2배 크기 때문에 수지는 흑자 유지 전망
 - 국민연금기금 수지는 2017년 38.8조원(GDP 대비 2.3%)에서 2021년 46.0조원(GDP 대비 2.2%)으로 흑자가 지속되지만, 지출이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지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6.1%에 비해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9.3%)이 3.3%p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수입이 지출보다 약 3배 정도 크기 때문임
 -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7년 0.3조원(GDP 대비 0.02%)에서 2021년 3.1조원(GDP 대비 0.15%)으로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고용보험기금 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지출(연평균 증가율 6.7%)보다 수입(연평균 증가율 11.9%)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

4.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7년 659.9조원(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40.7조원(GDP 대비 41.0%)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5년(2012~2021년)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9.1%에 비해 2.9%p 감소하여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방정부 순채무를 2017년 33.4조원에서 2021년 30.1조원으로 연평균 2.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³⁾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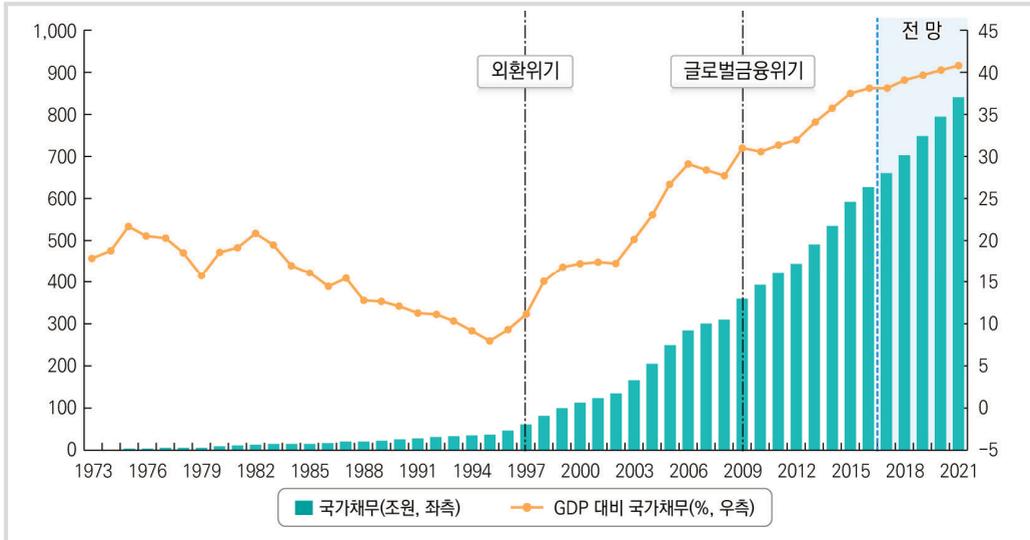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59.9 (38.5)	702.2 (39.3)	748.3 (39.9)	794.6 (40.5)	840.7 (41.0)	6.2	9.1
중앙정부 (국가채무 대비 비율)	626.6 (94.9)	669.1 (95.3)	716.0 (95.7)	763.8 (96.1)	810.6 (96.4)	6.6	8.6
- 적자성 채무 (중앙정부채무 대비 비율)	344.3 (55.0)	372.2 (55.6)	408.2 (57.0)	446.0 (58.4)	489.2 (60.3)	9.2	12.6
- 금융성 채무 (중앙정부채무 대비 비율)	282.2 (45.0)	296.9 (44.4)	307.9 (43.0)	317.7 (41.6)	321.4 (39.7)	3.3	4.6
지방정부 (국가채무 대비 비율)	33.4 (5.1)	33.1 (4.7)	32.3 (4.30)	30.9 (3.9)	30.1 (3.6)	-2.6	18.3

- 국가채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1994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18.4%)보다 GDP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22.1%)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 반면, 1994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GDP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국가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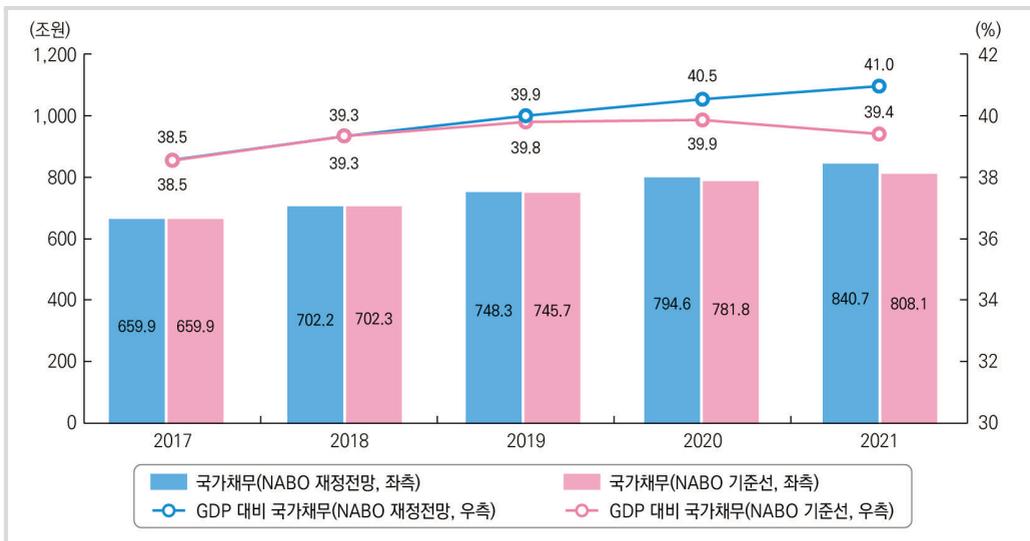
3)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1년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기준선과 비교하면, 2017년과 2018년 각각 38.5%, 39.3%로 기준선과 차이가 없으나, 2019년부터 기준선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져 2021년에는 1.6%p 높을 전망
 - 「NABO 기준선」의 국가채무는 2017년 659.9조원(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08.1조원(GDP 대비 39.4%)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III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1.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정부는 2017~2021년간 총수입을 연평균 증가율 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
 - 국세수입은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및 과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 투명성 강화 등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연평균 5.8% 증가 예상
- 총지출은 2017~2021년간 연평균 증가율 5.1%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
 - 총지출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GDP성장률 보다 높은 연평균 5.1%(2017년은 추경기준)로 관리할 계획
 -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0%)보다 0.1%p 높은 수준으로,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및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하여 총지출을 확대한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지표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총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0
(전년 대비 증가율)	(5.9)	(8.1)	(5.7)	(5.4)	(4.4)	(4.4)	
총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1
(전년 대비 증가율)	(3.6)	(6.1)	(4.6)	(5.7)	(5.2)	(5.1)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33.0	-38.4	-44.3	
(GDP 대비 비율)	(-1.7)	(-1.7)	(-1.6)	(-1.8)	(-2.0)	(-2.1)	
통합재정수지	13.7	13.0	18.1	18.0	15.3	12.5	
(GDP 대비 비율)	(0.8)	(0.8)	(1.0)	(1.0)	(0.8)	(0.6)	
국가채무	682.4	666.9	708.9	749.1	793.0	835.2	5.8
(GDP 대비 비율)	(40.4)	(38.9)	(39.6)	(39.9)	(40.3)	(40.4)	

주: 연평균 증가율은 추경기준임

-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28.9조원에서 2021년 -44.3조원으로 적자 폭 증가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1.7%에서 2021년 -2.1%로 GDP 대비 -2% 내외에서 관리할 계획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7년 0.8%에서 2021년 0.6%까지 감소할 전망
- 국가채무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선제적 투자 등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666.9조원(GDP 대비 38.9%)에서 2021년 835.2조원(GDP 대비 40.4%)으로 증가
 - 계획기간(2017~2021년) 동안 GDP 대비 비율은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계획

2. NABO 전망과의 비교

가. 총수입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수입은 NABO 전망에 비해 2017년 6.3조원 적지만, 그 격차가 점차 좁혀져 2021년은 0.3조원 많을 것으로 나타남(5년간 합계는 -6.1조원)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은 2017년 423.1조원에서 2021년 513.5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 NABO 전망에서 총수입은 2017년 429.4조원에서 2021년 513.3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
 - 정부와 NABO 간 차이의 주요 원인은 2017년 국세수입을 NABO가 높게 전망한 것에 기인하며, 정부가 경상GDP성장률을 NABO 전망치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음에도 국세수입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세수추계 상의 차이로 보임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수입



- 정부 계획에서 NABO 전망치를 차감한 국세수입 차이는 2017년 -9.3조원에서 2021년 -2.7조원으로 격차 감소
 -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은 2017년 251.1조원에서 2021년 315.0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NABO 전망은 2017년 260.4조원에서 2021년 317.7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세수입의 차이는 NABO 전망에서 2017년 추경예산 대비 9.3조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
-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2017년 3.0조원에서 2021년 2.9조원 전망
 - 정부가 전망한 국세외수입은 2017년 172.0조원에서 2021년 198.5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NABO 전망에서는 2017년 169.0조원에서 2021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총지출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1%로서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5.6%)에 비해 0.5%p 낮게 전망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총지출은 NABO 전망에 비해 총 23.3조원 적음
 - 의무지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의 연평균 증가율 7.8%보다 0.9%p 낮은 6.9%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10.8조원)과 지방이전재원(-9.2조원)은 정부 계획과 NABO 전망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총지출	410.1	429.0	453.3	476.7	500.9	2,270.0	5.1
- 의무지출	201.1	219.0	235.5	248.7	262.2	1,166.4	6.9
- 재량지출	209.0	209.9	217.9	228.0	238.7	1,103.6	3.4
NABO 재정전망(B)							
총지출	409.7	431.0	461.7	481.5	509.4	2,293.3	5.6
- 의무지출	200.7	221.1	243.9	253.4	270.7	1,189.7	7.8
- 재량지출	209.0	209.9	217.9	228.0	238.7	1,103.6	3.4
차 이 (A-B)							
총지출	0.4	-2.0	-8.4	-4.8	-8.5	-23.3	-0.5
- 의무지출	0.4	-2.0	-8.4	-4.8	-8.5	-23.3	-0.9
- 재량지출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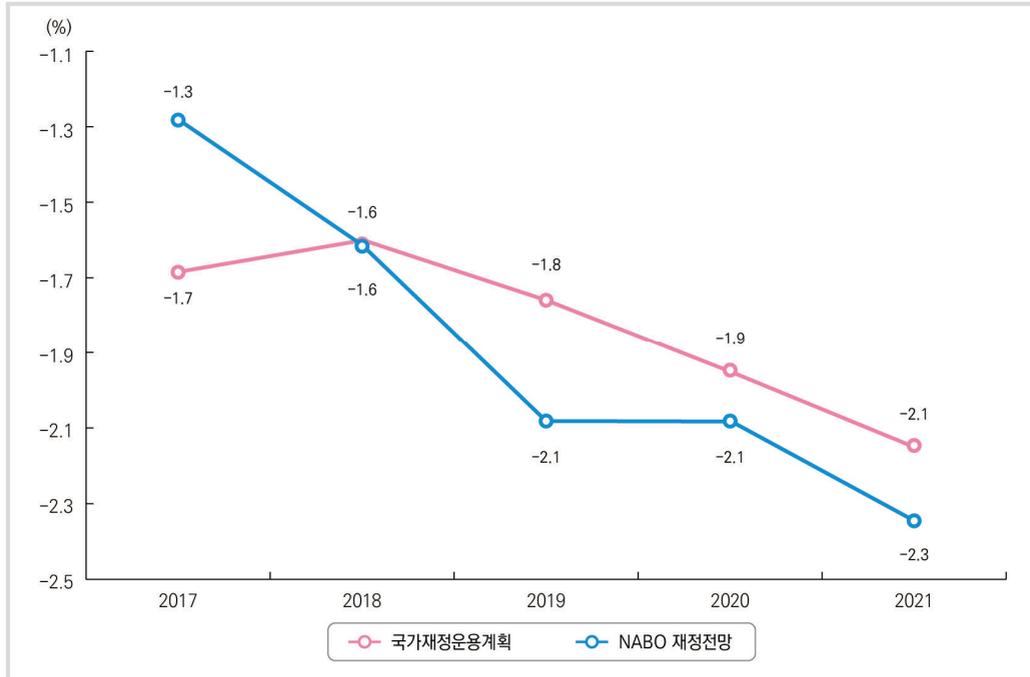
-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차이(-10.8조원)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증가율(8.3%)을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9.7%)에 비해 1.4%p 낮게 전망하였기 때문
 - 항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3.4조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4.0조원), 고용보험(-1.0조원) 등에서 차이 발생
 - NABO와 정부 간 거시경제변수, 급여대상자 수 등 전망 방식의 차이가 주요인

- 지방이전재원에서 정부 계획과 NABO 전망 간의 5년간 격차(-9.2조원)가 큰 이유는 지방이전재원 추계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와 교육세 등에 대한 전망 차이가 원인
 - NABO 전망에서는 2017년 결손분 4.7조원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에 모두 정산한다고 가정한 것도 차이 발생요인으로 작용

다.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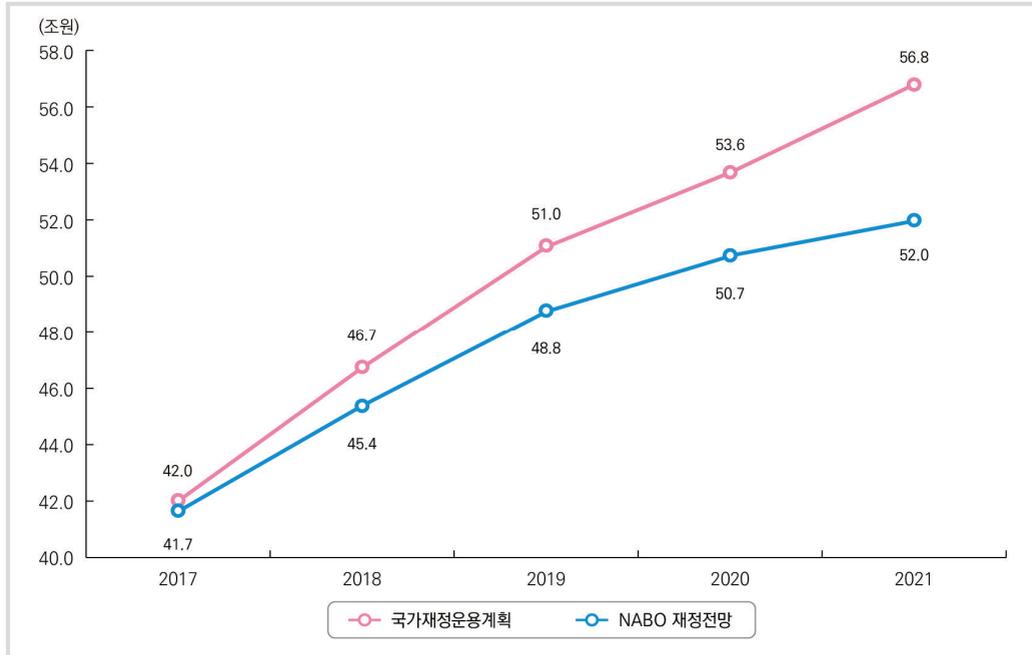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전망에 비해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2021년 8.7조원 더 높은 것으로 전망
 - 정부 계획은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2017년 13.0조원(GDP 대비 0.8%)에서 2021년 12.5조원(GDP 대비 0.6%)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NABO 전망은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2017년 19.7조원(GDP 대비 1.2%)에서 2021년 3.9조원(GDP 대비 0.2%)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정부 계획과 NABO 전망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차이는 2018년 0.2조원에서 2021년 3.8조원까지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7년 -28.9조원에서 2021년 -44.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NABO는 2017년 -22.0조원에서 2021년 -48.1조원으로 -26.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17년 -1.7%에서 2021년 -2.1%로 -2% 내외에서 관리할 계획이지만, NABO 전망에 의하면 2017년 정부 계획보다 높은 -1.3%이었으나, 2018년 이후 정부 계획보다 낮아져 2021년에는 -2.3%로 정부 계획 대비 -0.2%p 차이가 예상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규모가 NABO 전망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양 전망의 차이는 2017년 0.3조원에서 2021년에는 4.8조원까지 증가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규모를 2017년 42.0조원에서 2021년 56.8조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NABO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규모를 2017년 41.7조원에서 2021년 52.0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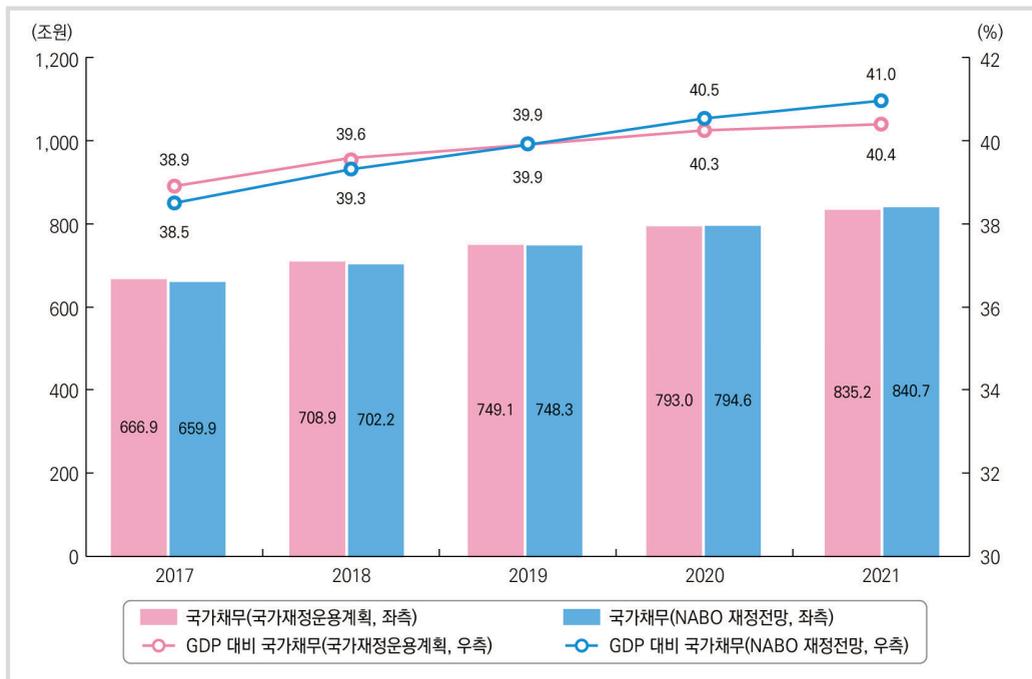
라.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전망에 비해 2017~2018년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국가채무가 2017년 666.9조원에서 2021년 835.2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NABO는 국가채무가 2017년 659.9조원에서 2021년 840.7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7년 38.9%에서 2021년 40.4%로 5년간 40% 초반에서 관리할 계획이고 NABO는 2017년 38.5%에서 2021년에 4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가 2017년 666.9조원(GDP 대비 38.9%)에서 2021년 835.2조원(GDP 대비 40.4%)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 NABO는 중앙정부 채무가 2017년 626.6조원(GDP 대비 36.6%)에서 2021년 810.6조원(GDP 대비 39.5%)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 계획과 비교하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할 경우 총수입은 5년간 총 15.3조원 적을 전망, 총지출은 동 기간 총 20.7조원 적을 전망
-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7년 33.4조원(GDP 대비 1.9%)에서 2021년 30.1조원(GDP 대비 1.5%)으로 연평균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정부 순채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전망치를 그대로 준용하여 정부 계획과 동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요 약 / ix

PART

I	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개요	• 1
	1. 재정전망의 의의	1
	2. 재정전망 방식	2
	가. 개 요	2
	나. 항목별 전망 방법	2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4
	가. 경제변수	4
	나. 인구변수	5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7

PART

II	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결과	• 11
	1. 총수입	11
	가. 개 관	11
	나. 국세수입	14
	다. 국세외수입	18
	2. 총지출	20
	가. 개 관	20
	나. 의무지출	23
	다. 재량지출	35

3. 재정수지	38
가. 개 관	38
나. 통합재정수지	38
다. 관리재정수지	40
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2
4. 국가채무	45
가. 개 관	45
나. 중앙정부 채무	47
다. 지방정부 채무	48

PART

Ⅲ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 51

1.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51
2. NABO 전망과의 비교	52
가. 개 관	52
나. 총수입	54
다. 총지출	56
라. 재정수지	62
마. 국가채무	65

부 록 • 67

표 차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표 1]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전망	4
[표 2]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5
[표 3]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수입 부문	8
[표 4]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지출 부문	9
[표 5] 「NABO 재정전망」: 총수입	11
[표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13
[표 7]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15
[표 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16
[표 9]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	19
[표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19
[표 11] 「NABO 재정전망」: 총지출	21
[표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22
[표 1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24
[표 14]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25
[표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생활보장	26
[표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지원	27
[표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금	29
[표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산재보험기금	30
[표 1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31
[표 20] 「NABO 재정전망」: 아동수당	32
[표 2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32
[표 2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보훈부문	33
[표 2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34
[표 2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35
[표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35
[표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총량	36
[표 2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37
[표 28]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38
[표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39

[표 3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41
[표 31]	「NABO 재정전망」: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2
[표 32]	「NABO 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 수지	43
[표 33]	「NABO 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 수지	43
[표 34]	「NABO 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 수지	44
[표 35]	「NABO 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 수지	45
[표 36]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총량표	45
[표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47
[표 38]	「NABO 재정전망」: 중앙정부 채무	48
[표 39]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정부 순채무	49
[표 4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경제성장률	51
[표 41]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지표	52
[표 4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량표	53
[표 4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수입	54
[표 4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차이 원인: 총수입	55
[표 4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지출	56
[표 4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의무지출	57
[표 47]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59
[표 4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차이 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	60
[표 49]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지방이전재원	61
[표 5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이가지출	61
[표 5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기타 의무지출	62
[표 5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차이 원인: 복지 외 의무지출	62
[표 5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	63
[표 5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	64
[표 5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65
[표 5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66

그림 차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그림 1] 장래인구추계: 2012~2021년	7
[그림 2] 총수입 항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12
[그림 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14
[그림 4]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15
[그림 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17
[그림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20
[그림 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22
[그림 8]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23
[그림 9]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24
[그림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생활보장	27
[그림 1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지원	28
[그림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금	29
[그림 1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산재보험기금	30
[그림 1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31
[그림 15] 성질별 재량지출 추이: 2012~2021년	37
[그림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40
[그림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41
[그림 18]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1년	46
[그림 1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47
[그림 20] 지방정부 순채무 추이: 1997~2021년	49
[그림 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수입	55
[그림 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지출	57
[그림 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63
[그림 2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65
[그림 2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66

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개요

1. 재정전망의 의의

정부는 지난 9월 1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및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새 정부 정책과제의 이행을 위해 429.0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자원배분계획을 담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많은 정책들은 그 집행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래 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의 변화를 전망¹⁾한 것이다.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분석을 하였다.

첫째, NABO 전망에서는 전망 결과를 과거 실적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지표들이 어떻게 변해 왔고, 향후 어떻게 변할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망 결과를 2017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발생하는 2017~2021년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인 기준선(Baseline)²⁾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경우의 재정지표들과 향후 정책 변화 시 재정지표들의 움직임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전망은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가정 하에 예상되는 최선의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경제상황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2) 기준선은 현행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한다. 기준선은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등 미래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년간 재원배분계획과 NABO 전망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5개년 정부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정전망 방식

가. 개요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정책은 물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지출 측면의 정책과 세계개편안에 따른 수입 측면의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하고 장래 예상되는 재정변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각 항목별로 5년간의 소요비용을 경상가격 기준으로 직접 추계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피드백 효과)는 전망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준선과의 비교를 위해 전망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정책과 제도가 향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예상되는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함께 전망하였다.

나. 항목별 전망 방법

(1) 총수입

총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³⁾을 기초로,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추계한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용자회수,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등 총수입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하였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7. 10.)

각 세목별 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과세자 수와 과세 미달자 수, 소득신고율, 소비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하여 과거 추이 및 당해 연도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 총지출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만 직접 추계를 실시하였다. 각 의무지출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변수와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인구 등 인구변수, 각 사업별로 핵심이 되는 추계변수로 구성된 산출식을 토대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변수 및 산출식은 정부의 각 사업별 지출 산출방식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가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NABO 재정전망과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지출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량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자원배분계획을 반영하였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을 통하여 균형수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때 모수가 되는 GDP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으로 산출된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과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등으로 구성되는데, NABO의 전망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과거 적자성 채무에 누적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금융성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는 정부의 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경제변수

전망에 필요한 경제성장률 등 경제변수는 NABO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전망을 사용하였다.

실질GDP는 2017~2021년 기간 평균 2.8% 성장하고, 경상GDP는 같은 기간 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 기간 국내경제는 소비개선과 세계경제 성장세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과 SOC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표 1]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전망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실질GDP성장률	2.9	2.8	2.9	2.8	2.7	2.8
실업률	3.8	3.8	3.6	3.7	3.7	3.7
취업자 수 증가율	1.3	1.2	1.2	1.1	1.1	1.2
경제활동참가율	63.1	63.3	63.4	63.5	63.7	63.4
소비자물가	2.0	1.9	2.1	2.2	2.2	2.1
국고채금리(3년만기)	1.8	2.2	2.5	2.6	2.7	2.4
GDP디플레이터	1.7	1.6	1.9	1.9	1.9	1.8
경상GDP성장률	4.6	4.4	4.8	4.7	4.6	4.6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7~2021년 기간 평균 1.2%(32만명)로 지난 2012~2016년 기간 평균 증가율 1.3%(39.8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정체, 전통 주력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와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의 한계 등이 고용증가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18년 3.8%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2019년 3.6%로 하락하고 2020~2021년 기간 중에는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와 함께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017년 63%대에 진입하고 2021년에는 63.7%에 이를 전망이다.

2017~2021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세계경기 회복 및 민간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 평균 상승률이 2.1%를 나타낼 전망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함에 따라 향후 해외 총수요압력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요인의 경우, 실질GDP갭이 소폭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어 민간 소비의 점진적 회복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국내 잠재성장률의 완만한 하향세가 추정되고, 경기변동 폭 또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 총수요압력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2021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평균 증가율이 2.4%를 나타낼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주요국 정책변화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국내 실물경기 측면에서의 금리상승 압력은 크지 않은 편이므로 전체적인 시장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나. 인구변수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2016년 발표하였다. 본 재정전망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전망하였다.

[표 2]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평 균
총 인구 증가율	0.4	0.4	0.3	0.3	0.3	0.3
합계출산율	1.2	1.2	1.2	1.2	1.3	1.2
출생률	8.0	8.0	7.9	7.9	7.9	7.9
사망률	5.7	5.9	6.1	6.2	6.4	6.1
0~5세 인구 비중	5.1	5.0	4.9	4.8	4.7	4.9
65세 이상 인구 비중	13.8	14.3	14.8	15.6	16.4	15.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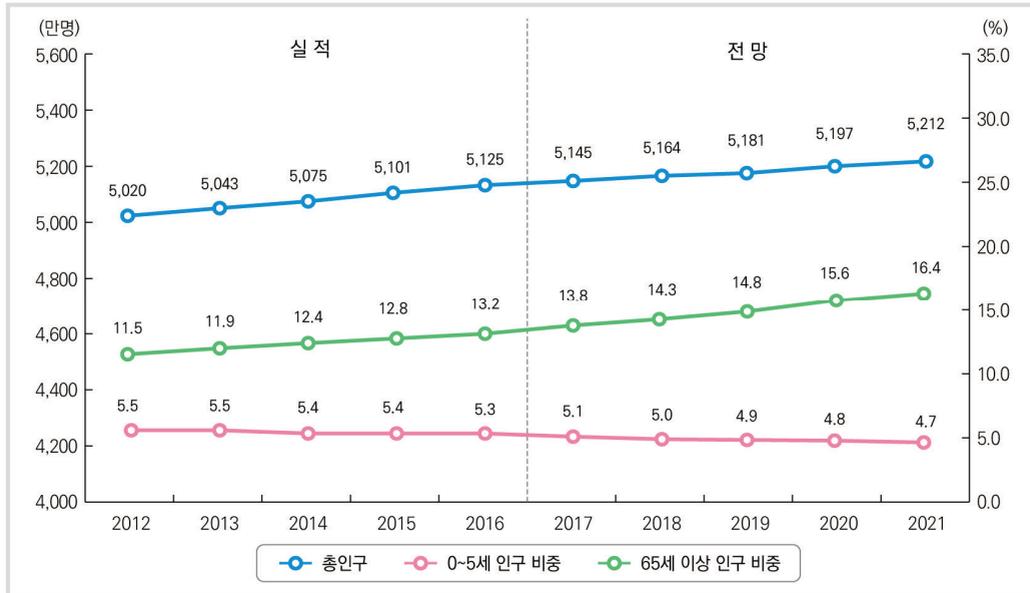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는 2015년 5,101만명에서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에 다다른 뒤 2065년 4,302만명으로 연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NABO 재정전망」의 추계기간 동안의 총 인구 수를 살펴 보면, 2017년 5,145만명에서 2021년 5,212만명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12년 5,020만명에서 2016년 5,125만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하여 온 것과 비교하면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총 인구의 증가세 둔화는 출생아와 0~5세 영유아 수의 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명(총 인구 대비 0.8%)에서 2065년 26만명(총 인구 대비 0.6%)으로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0~5세 영유아의 경우 2015년 273만명(총 인구 대비 5.4%)에서 2065년 163만명(총 인구 대비 3.8%)으로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NABO 재정전망」의 추계기간 동안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7년 41.3만명에서 41.0만명으로 연평균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5세 영유아 수는 동 기간 263.9만명(총 인구 대비 5.1%)에서 245.6만명(총 인구 대비 4.7%)으로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12년 278.4만명(총 인구 대비 5.5%)에서 2016년 271.1만명(총 인구 대비 5.3%)으로 연평균 -0.7% 감소하였던 것보다도 빠르게 0~5세 영유아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 수는 2015년 654만명(총 인구 대비 12.8%)에서 2025년 1,051만명(총 인구 대비 20.0%)으로 1,000만명을 넘어 2065년 1,827만명(총 인구 대비 42.5%)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분석의 추계기간 동안을 살펴보면, 2017년 707.6만명(총 인구 대비 13.8%)에서 2021년 854.4만명(총 인구 대비 16.4%)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576.7만명(총 인구 대비 11.5%)에서 2016년 676.3만명(총 인구 대비 13.2%)으로 연평균 4.1% 증가보다 더 빠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대수명도 2015년 82.1세(남자 79.0세, 여자 85.2세)에서 2065년 90.0세(남자 88.4세, 여자 91.6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인구 1,000명 당 사망률이 2015년 5.4%(사망자 수 27.7만명)에서 2065년 17.2%(사망자 수 74.1만명)로 11.8%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기간(2017~2021년) 동안을 살펴보면, 사망률은 2017년 5.7%(사망자 수 29.6만명)에서 2021년 6.4%(사망자 수 33.4만명)로 0.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장래인구추계: 2012~2021년



자료: 통계청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NABO 재정전망」은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은 물론 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법개정안 등에 제시된 총수입과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제안들이 채택되어 시행될 것을 가정하고 전망한다.

(1) 총수입

총수입 중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화로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고용증대세제 신설,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식양도소득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이 있고, 사회보장성기금 등 국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이 있다.

국세수입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포함된 일몰기한은 이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수입 부문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세제 신설(고용인원당 700만원 공제) -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의 전환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000억원 초과 22% → 25%)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억원~5억원 38% → 40%, 5억원 초과 40% → 42%)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서울조정: 20%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대주주범위 확대: 20억원 초과에서 단계적 축소하여 21년 3억원 초과)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현행) 7% → ('18) 5% → ('19 이후) 3%)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10%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금 대상을 외국인한부모까지 확대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kg당 6원 인상) •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을 가정하여 산정 - 대표적인 항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인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상향조정 • 산재보험 급여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한 보험료를 상향 조정

(2) 총지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공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복지 지원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형 인재 양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지출 정책들을 담고 있다.

먼저 의무지출 항목에서의 정책변화를 보면,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 중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지급일수 증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0~5세 아동에게는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량지출에서는 공무원 인력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확대, 자활근로, 자립기반 마련 등 일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및 독감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재량지출에는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미반영) 등 경직성 경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출 성격상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아 NABO 전망에서는 재량지출 항목별로 직접 추계하지 않고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배분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지출 부문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복지분야 의무지출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까지 3.5만명, 22년까지 9만명 수급자 확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까지 7만명, 22년까지 23만명 수급자 확대 ※ 수급자 확대 계획은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2017. 8.) 참조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지급(2018년 50~70% → 2020년 100%)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소득기준을 2018년 중위소득 43% → 2019년 44% → 2020년 45%로 상향 - 임차가구 기준임차료 인상(금지별로 2.9%~6.6%) - 자가가구 보수비 인상(경보수 350만원 → 378만원, 중보수 650만원 → 702만원, 대보수 950만원 → 1,026만원)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2019년부터 소정급여일수 30일 연장 • 육아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하반기부터 ‘아빠의 달’ 월 상한액 200만원으로 일괄 인상 - 2019년부터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기간에 대해 급여단가 인상 (통상임금의 40% → 50%, 월 상한액 100만원 → 120만원, 하한액 50만원 → 70만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 증가율(2013~2018년 평균 9.15%)을 적용한 하한액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급여기준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임금의 60% → 80%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급여 지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도보 등 통상적 경로를 통한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시 산재보험급여 지급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액 인상: 20만원(‘17) → 25만원(‘18~’20) → 30만원(‘21~)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신설: 0~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하반기 시행으로 6개월 적용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2017년 206,050원 → 2018년 250,000원 → 2021년 300,000원)
보훈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2018년 5%, 2019년 3.5%, 2020년 3.0%, 2021년 2.5% •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률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률 60% → 90%로 확대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 8만원 인상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복지 외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변화: 「2017년 세법개정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20년부터는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지원분만 계속 지원하되 어린이집 지원분은 지방이전재원으로 분류 • 2017년 결손분(NABO 전망치와 정부와의 차액)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2년 뒤인 2019년에 모두 정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반영
이자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모두 당해년도 국가채무에 반영되며 국고채금리(3년)을 곱한 이자지출은 이듬해 2018년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분석 기간인 2017~2021년 국가채무 중 상환은 없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모두 국가채무에 누적된다고 가정
기타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017년간 의무지출 증가율 연평균 5.8%로 기타 의무지출 증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준선은 매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17~'21년 연평균 2.1%) 만큼 증가 가정

재량지출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따라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정부와 동일한 수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준선은 매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17~'21년 연평균 2.1%) 만큼 증가 가정 • 재량지출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018년 2.8조원) - 공무원 17.4만명 중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순증(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복지센터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34세 이하 일하는 수급자 지원)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확대(초등학생 까지 확대) -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17만호 씩 2022년까지 85만호 공급) - 고등교육 국가 장학금 지원규모 연차적 확대 -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확대(연간 1인당 6만원 → 7만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R&D 투자 확대('17년 19.5조원 → '21년 20.0조원) - 도시재생뉴딜 추진 - 농산물 가격 불안 위험 최소화 위한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

I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결과

1. 총수입

가. 개 관

총수입은 2017년 429.4조원에서 2021년 513.3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법인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정체기를 포함하는 과거 5년(2012~201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4.1%)과 비교하면 0.5%p 상회하는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이 연평균 5.1% 증가하여 총수입의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국세외수입은 연평균 3.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외수입 중 세외수입은 연평균 2.9% 증가하고 기금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NABO 재정전망」: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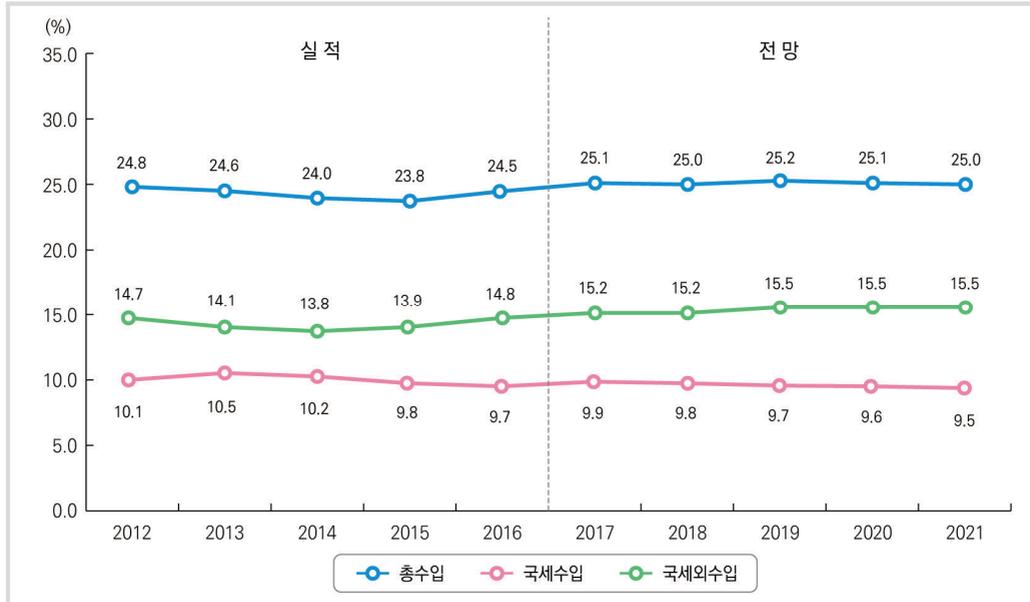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4.6	4.1
(GDP 대비 비율)	(25.1)	(25.0)	(25.2)	(25.1)	(25.0)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5.1	4.5
(GDP 대비 비율)	(15.2)	(15.2)	(15.5)	(15.5)	(15.5)		
국세외수입	169.0	175.5	181.0	188.0	195.6	3.7	3.5
(GDP 대비 비율)	(9.9)	(9.8)	(9.7)	(9.6)	(9.5)		
•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2.9	-1.8
(GDP 대비 비율)	(1.5)	(1.5)	(1.4)	(1.4)	(1.4)		
• 기금수입	143.5	149.2	154.0	160.3	167.0	3.9	4.6
(GDP 대비 비율)	(8.4)	(8.3)	(8.2)	(8.2)	(8.2)		
- 사회보장성기금 ¹⁾	80.8	88.2	93.7	99.4	104.7	6.7	4.9
(GDP 대비 비율)	(4.7)	(4.9)	(5.0)	(5.1)	(5.1)		

주: 1)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각 기금의 기여금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7~2021년 기간 평균 25.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17년 15.2%에서 2019년 이후 15.5%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9.9%에서 2021년 9.5%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총수입 항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현행 세제 등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기준선과 비교할 때, 세법개정안 등의 정책 변화로 인해 약 32.4조원의 재정수입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 관련 주요 정책 변화가 2018년부터 시행될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2017년에는 기준선과 차이가 없으나, 2018년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 변화를 보면, 기준선에서는 2017년 25.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24.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법개정안 등 정책변화를 가정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현행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는 국세수입의 경우 기준선은 연평균 4.6%로 증가하지만, 정책변화를 반영할 경우 0.5%p가 증가한 5.1%로 전망되어 기준선 대비 18.6조원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국세외수입의 기준선은 연평균 3.2%로 증가하지만 정책변화를 반영할 경우 0.5%p가 증가한 3.7%로 전망되어 기준선 대비 13.7조원의 수입이 추가 확보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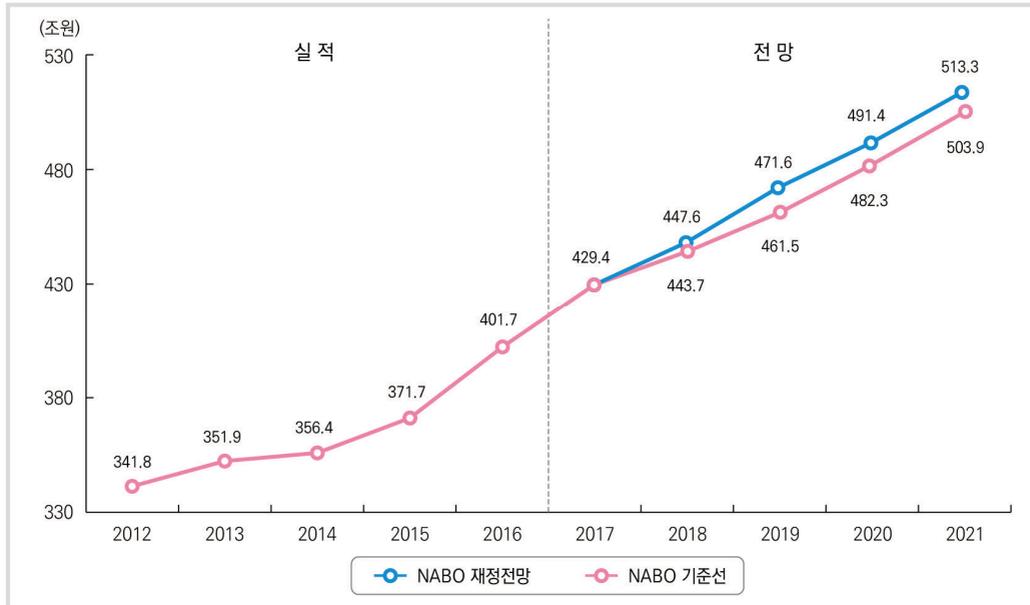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를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표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29.4 (25.1)	447.6 (25.0)	471.6 (25.2)	491.4 (25.1)	513.3 (25.0)	2,353.3	4.6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1,444.2	5.1
	국세외수입	169.0	175.5	181.0	188.0	195.6	909.1	3.7
	•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135.1	2.9
	• 기금수입	143.5	149.2	154.0	160.3	167.0	773.9	3.9
	- 사회보장성기금	80.8	88.2	93.7	99.4	104.7	466.8	6.7
NABO 기준선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29.4 (25.1)	443.7 (24.8)	461.5 (24.6)	482.3 (24.6)	503.9 (24.6)	2,320.9	4.1
	국세수입	260.4	271.2	283.9	298.0	312.1	1,425.5	4.6
	국세외수입	169.0	172.5	177.7	184.4	191.8	895.4	3.2
	• 세외수입	25.5	26.3	27.0	27.7	28.6	135.1	2.9
	• 기금수입	143.5	146.2	150.7	156.7	163.2	760.3	3.3
	- 사회보장성기금	80.8	85.2	90.3	95.9	100.9	453.1	5.7
차 이 (A-B)	총수입	-	3.9	10.1	9.1	9.4	32.4	0.5
	국세수입	-	0.9	6.7	5.4	5.5	18.6	0.5
	국세외수입	-	3.0	3.3	3.6	3.8	13.7	0.5
	• 세외수입	-	-	-	-	-	-	-
	• 기금수입	-	3.0	3.3	3.6	3.8	13.6	0.6
	- 사회보장성기금	-	3.3	3.4	3.6	3.8	13.7	1.0

[그림 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나.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2017년 260.4조원에서 2021년 317.7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법인 실적 부진 및 자산시장 정체시기를 포함하는 직전 5년(2012~201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4.5%와 비교하면 0.6%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명목임금 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소득세의 증가,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대외거래 및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증가 등 주요 세목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은 세수호조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9.3조원의 국세수입이 초과 징수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의 이러한 세수호조를 견인하던 자산시장이 금리인상의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 위험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인해 증가여력이 제한되어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이후부터 15.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⁴⁾

4)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세수호조 등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2017년 7.4%로 시작하여 2017년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가 반영되는 2019년에 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2021년 4.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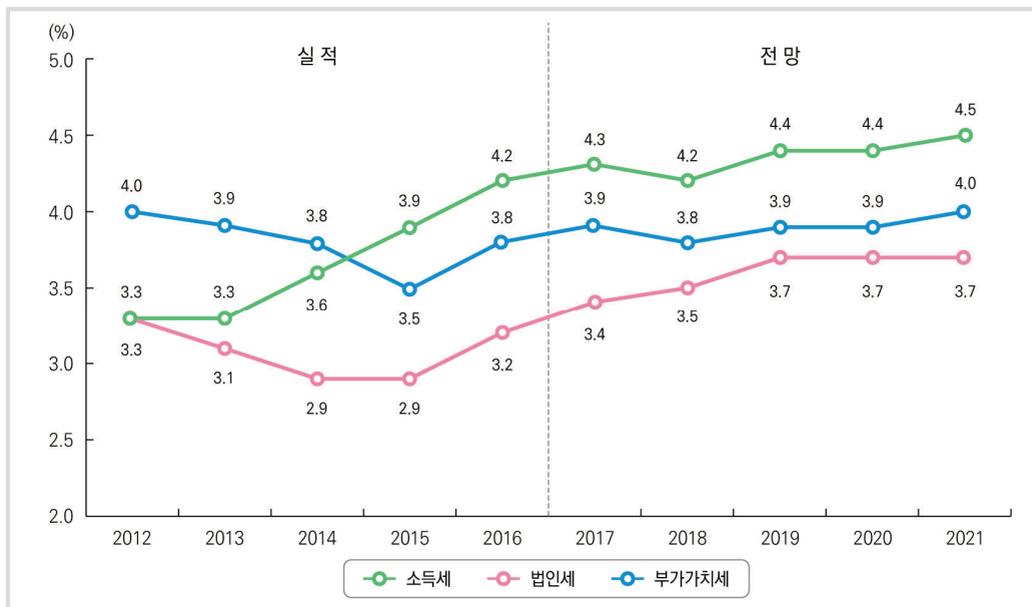
[표 7]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60.4 (15.2)	272.1 (15.2)	290.6 (15.5)	303.4 (15.5)	317.7 (15.5)	5.1	4.5
소득세 (GDP 대비 비율)	72.9 (4.3)	75.7 (4.2)	81.6 (4.4)	86.7 (4.4)	92.0 (4.5)	6.0	10.6
법인세 (GDP 대비 비율)	58.1 (3.4)	63.1 (3.5)	69.7 (3.7)	72.1 (3.7)	75.2 (3.7)	6.7	3.2
부가가치세 (GDP 대비 비율)	66.0 (3.9)	68.7 (3.8)	73.2 (3.9)	77.4 (3.9)	82.1 (4.0)	5.6	2.7
기 타 (GDP 대비 비율)	63.4 (3.7)	64.6 (3.6)	66.1 (3.5)	67.2 (3.4)	68.4 (3.3)	1.9	2.0

국세수입의 항목별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소득세는 2017년 4.3%에서 2021년 4.5%로 0.2%p 높아질 전망이다. 법인세는 2017년 3.4%에서 2021년 3.7%로 0.3%p 높아질 전망이고, 부가가치세는 2017년 3.9%에서 2021년 4.0%로 0.1%p 높아질 전망이다.

[그림 4]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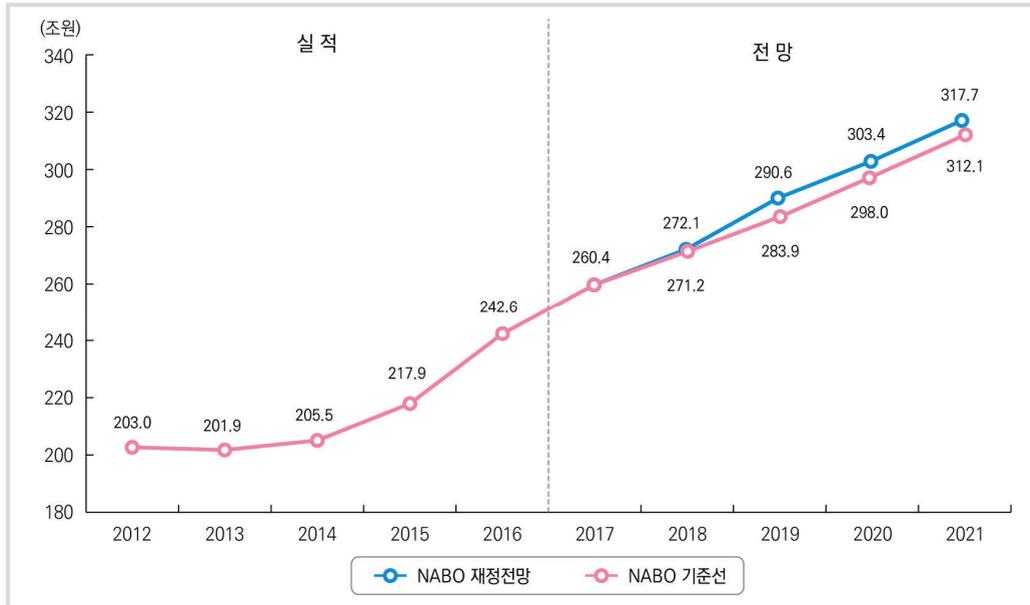
세법개정안 등 정책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기준선과 비교할 경우, 국세수입은 5년간 총 18.6조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등의 세원기반 확대에 기인한 제도변화의 요인으로 연평균 증가율(5.1%)이 기준선 전망(4.6%)보다 0.5%p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로 인해 기준선 전망의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2%를 유지하지만, NABO 전망은 2017년 15.2%에서 2021년 15.5%로 0.3%p 상승할 전망이다.

〔표 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60.4 (15.2)	272.1 (15.2)	290.6 (15.5)	303.4 (15.5)	317.7 (15.5)	1,444.2	5.1
	소득세	72.9	75.7	81.6	86.7	92.0	408.9	6.0
	법인세	58.1	63.1	69.7	72.1	75.2	338.2	6.7
	부가가치세	66.0	68.7	73.2	77.4	82.1	367.4	5.6
	기 타	63.4	64.6	66.1	67.2	68.4	329.7	1.9
NABO 기준선 (B)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60.4 (15.2)	271.2 (15.2)	283.9 (15.2)	298.0 (15.2)	312.1 (15.2)	1,425.5	4.6
	소득세	72.9	75.2	79.4	84.7	90.1	402.3	5.4
	법인세	58.1	62.9	65.7	69.2	72.2	328.1	5.6
	부가가치세	66.0	68.7	73.3	77.5	82.1	367.6	5.6
	기 타	63.4	64.4	65.5	66.5	67.7	327.5	1.7
차 이 (A-B)	국세수입	-	0.9	6.6	5.4	5.5	18.6	0.5
	소득세	-	0.5	2.2	2.0	1.9	6.6	0.6
	법인세	-	0.2	4.0	2.9	3.0	10.1	1.1
	부가가치세	-	-	-0.1	-0.1	-	-0.2	-
	기 타	-	0.2	0.6	0.7	0.7	2.2	0.2

[그림 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세목별로 구체적인 전망 결과를 보면, 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평균인급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7년 72.9조원에서 2021년 92.0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5년(2012~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10.6%)에 비해 4.6%p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은 2017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율의 하락세로의 전환과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과세여력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준선 대비 추가 소득세 수입은 5년간 총 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최고구간 소득세율 인상⁵⁾,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⁶⁾ 등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제도변화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호조,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2017년 58.1조원에서 2021년 75.2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인 영업실적 부진이 이어졌던 2012~2014년이 포함된 과거 5년(2012~2016년)간 연평균 증가율 3.2%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2020년부터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전년 대비 세수증가 효과 등이 사라짐에 따라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기준선 대비 추가 법인세 수입은 5년간 총 10.1조원에

5)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억원~5억원 38%→40%, 5억원 초과 40%→42%로 상향조정 하고 있다.
6)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20%→3억원 이하 20%, 3억원초과 25%로 조정하고, 대주주범위확대를 20억원 초과에서 단계적 축소하여 2021년 3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표 최고구간의 법인세율 인상(2,000억원 초과 22% → 25%) 등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2017년 66.0조원에서 2021년 82.1조원으로 과거 5년(2012~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2.7%)보다 2.9%p 높은 연평균 5.6%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원인은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7년 4.0%에서 2021년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통관수입 증가율 역시 2017~2021년 연평균 5.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대리납부(2019년 이후 시행) 등 세법개정안 요인도 부가가치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기준선 대비 추가 부가가치세 수입은 5년간 총 0.2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세수감소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 조정(18년 9/109 → 10/110)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와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20년 까지) 등의 제도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세목 등의 경우 2017년 63.4조원에서 2021년 68.4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과거 5년(2012~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 2.0%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은 에너지 수요 증가 둔화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준선 대비 기타 세목 수입은 5년간 총 2.2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인상(kg당 6원 인상)과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현행 7% → '18년 5% → '19년 이후 3%) 등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다.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2017년 169.0조원에서 2021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5년(2012~2016년) 동안의 증가율(3.5%)과 비교하면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외수입 증가율이 2017~2021년 연평균 2.9%에 그치는 반면, 기금수입은 동 기간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7년 9.9%에서 2021년 9.5%로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세법개정안은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18~'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로 상향조정 하고 있다.

[표 9]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국세외수입(I+II) (GDP 대비 비율)	169.0 (9.9)	175.5 (9.8)	181.0 (9.7)	188.0 (9.6)	195.6 (9.5)	3.7	3.5
세외수입(I) (GDP 대비 비율)	25.5 (1.5)	26.3 (1.5)	27.0 (1.4)	27.7 (1.4)	28.6 (1.4)	2.9	-1.8
기금수입(II) (GDP 대비 비율)	143.5 (8.4)	149.2 (8.3)	154.0 (8.2)	160.3 (8.2)	167.0 (8.2)	3.9	4.6
• 사회보장성기금 (GDP 대비 비율)	80.8 (4.7)	88.2 (4.9)	93.7 (5.0)	99.4 (5.1)	104.7 (5.1)	6.7	4.9

항목별로 세외수입은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과 기업특별회계영업수익의 완만한 증가로 2017년 25.5조원에서 2021년 28.6조원으로 연평균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 반면, 기금수입은 명목임금 상승 및 가입자 증가,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6.7%)의 영향으로 2017년 143.5조원에서 2021년 167.0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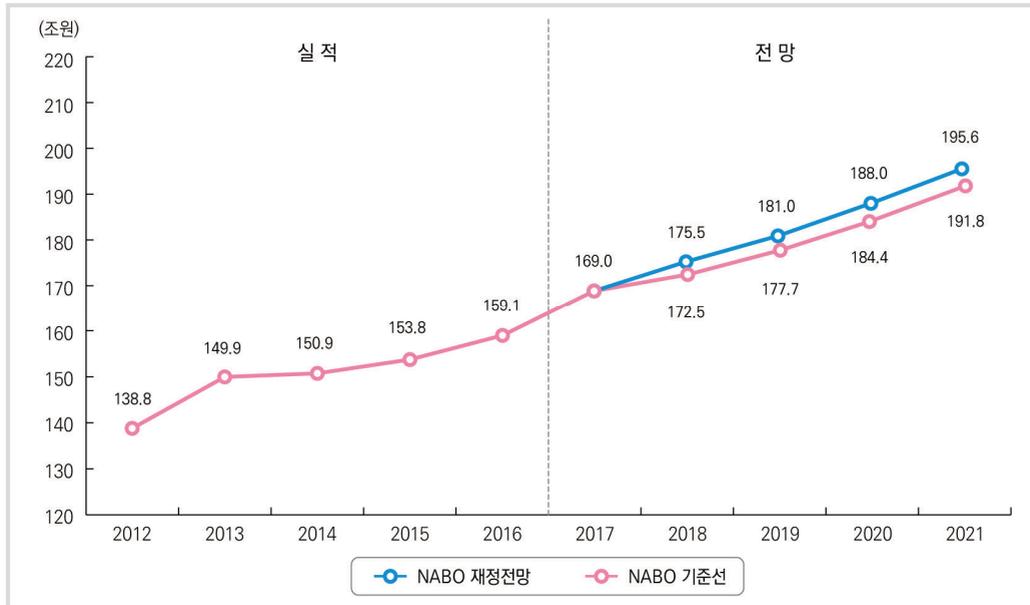
[표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국세외수입(I+II) (GDP 대비 비율)	169.0 (9.9)	175.5 (9.8)	181.0 (9.7)	188.0 (9.6)	195.6 (9.5)	909.1	3.7
	세외수입(I)	25.5	26.3	27.0	27.7	28.6	135.1	2.9
	기금수입(II)	143.5	149.2	154.0	160.3	167.0	773.9	3.9
	• 사회보장성기금	80.8	88.5	93.7	99.5	104.7	467.3	6.7
NABO 기준선 (B)	국세외수입(I+II) (GDP 대비 비율)	169.0 (9.9)	172.5 (9.7)	177.7 (9.5)	184.4 (9.4)	191.8 (9.4)	895.4	3.2
	세외수입(I)	25.5	26.3	27.0	27.7	28.6	135.1	2.9
	기금수입(II)	143.5	146.2	150.7	156.7	163.2	760.3	3.3
	• 사회보장성기금	80.8	85.2	90.3	95.9	100.9	453.5	5.7
차 이 (A-B)	국세외수입(I+II)	-	3.0	3.3	3.6	3.8	13.7	0.5
	세외수입(I)	-	-	-	-	-	-	-
	기금수입(II)	-	3.0	3.3	3.6	3.8	13.6	0.6
	• 사회보장성기금	-	3.0	3.4	3.6	3.8	13.7	1.0

기준선에 대비한 국세외수입은 5년간 총 13.7조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율 상향조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의 요인으로 연평균 증가율(3.7%)이 기준선 전망(3.2%)에 비해 0.5%p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로 인해 2021년이 되면, 정책변화를 반영할 경우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9.5%로 기준선보다 0.1%p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2. 총지출

가. 개 관

총지출은 2017년 409.7조원에서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5.6%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509.4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5개년(2012~201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4.4%와 비교하면 1.2%p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GDP 대비 총지출 비율도 2017년 23.9%에서 2021년 24.8%로 0.9%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NABO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09.7 (23.9)	431.0 (24.1)	461.7 (24.6)	481.5 (24.5)	509.4 (24.8)	5.6	4.4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00.7 (11.7)	221.1 (12.4)	243.9 (13.0)	253.4 (12.9)	270.7 (13.2)	7.8	5.0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09.0 (12.2)	209.9 (11.7)	217.9 (11.6)	228.0 (11.6)	238.7 (11.6)	3.4	3.9
총지출에 대한 비중, %							
의무지출	49.0	51.3	52.8	52.6	53.1		
재량지출	51.0	48.7	47.2	47.4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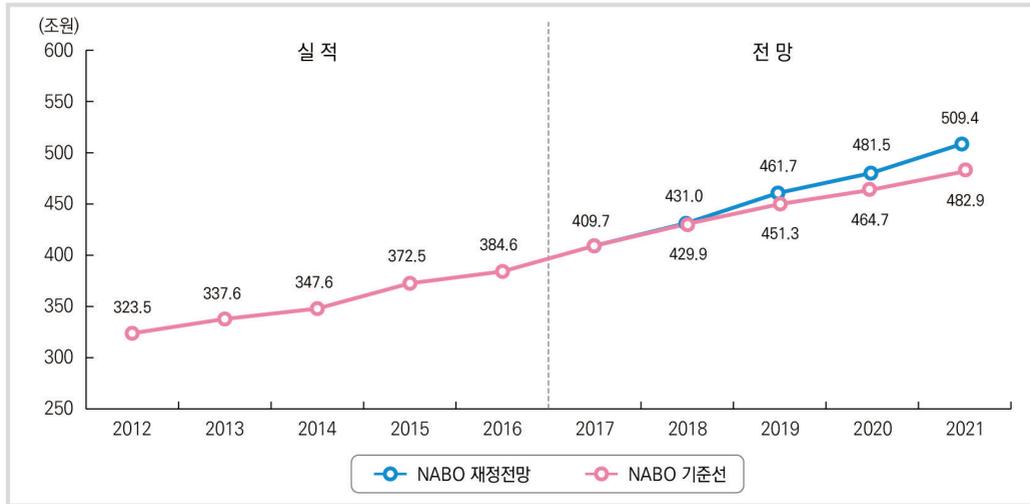
총지출의 빠른 증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에 기인하는데, 전망기간 동안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7.8%는 과거 5년(2012~2016)간 연평균 증가율 5.0%⁸⁾에 비해 2.8%p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도 2018년부터 50%를 초과하여 2021년에는 53.1%까지 증가하고,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도 2017년 11.7%에서 2021년 13.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복지 급여 단가, 노인인구 등 지급 대상자 수 증가 및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이 빠른 증가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준선과 대비한 총지출은 의무지출에서 40.3조원, 재량지출에서 14.6조원 등 5년간 총 54.9조원의 추가 지출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 추가 소요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양 의무자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2018년 이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확대에 기인한다. 재량지출 차이는 전망에 사용한 연평균 증가율 가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기준선 전망은 NABO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2017~2021년 연평균 2.1%)을 적용한 반면, 정책변화를 가정한 NABO 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용하여 연평균 3.4%⁹⁾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8)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을 위해 적용한 총지출 및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무지출 산정기준에 따른 결산 금액이며, 이 중 2016년 결산액은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결산액을 단순 합계하여 산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p.171.).

9)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에서 아동수당을 차감한 후의 상승률은 3.4%이다.

[그림 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표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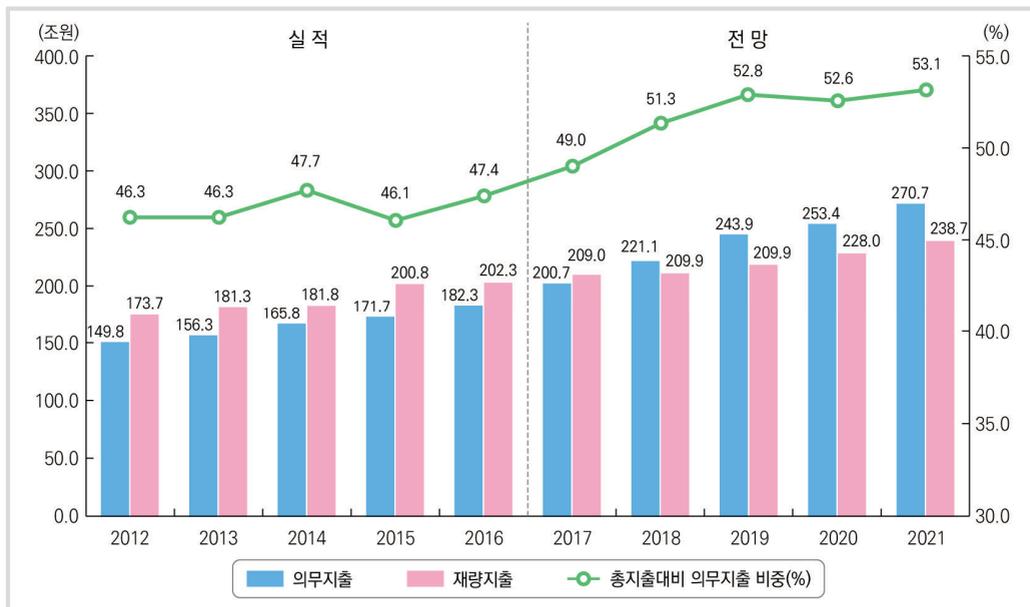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지출	409.7	431.0	461.7	481.5	509.4	2,293.3	5.6
	(GDP 대비 비율)	(23.9)	(24.1)	(24.6)	(24.5)	(24.8)		
	의무지출	200.7	221.1	243.9	253.4	270.7	1,189.7	7.8
	(GDP 대비 비율)	(11.7)	(12.4)	(13.0)	(12.9)	(13.2)		
	재량지출	209.0	209.9	217.9	228.0	238.7	1,103.6	3.4
	(GDP 대비 비율)	(12.2)	(11.7)	(11.6)	(11.6)	(11.6)		
총지출에 대한 비중, %								
	의무지출	49.0	51.3	52.8	52.6	53.1		
	재량지출	51.0	48.7	47.2	47.4	46.9		
NABO 기준선 (B)	총지출	409.7	429.9	451.3	464.7	482.9	2,238.4	4.2
	(GDP 대비 비율)	(23.9)	(24.1)	(24.1)	(23.7)	(23.5)		
	의무지출	200.7	216.9	233.8	242.4	255.7	1,149.6	6.2
	(GDP 대비 비율)	(11.7)	(12.1)	(12.5)	(12.4)	(12.5)		
	재량지출	209.0	213.0	217.5	222.3	227.2	1,089.0	2.1
	(GDP 대비 비율)	(12.2)	(11.9)	(11.6)	(11.3)	(11.1)		
총지출에 대한 비중, %								
	의무지출	49.0	50.5	51.8	52.2	53.0		
	재량지출	51.0	49.5	48.2	47.8	47.0		
차 이 (A-B)	총지출	-	1.1	10.5	16.8	26.5	54.9	1.4
	의무지출	-	4.2	10.1	11.0	14.9	40.3	1.5
	재량지출	-	-3.1	0.4	5.8	11.6	14.6	1.3

나. 의무지출

전망기간 동안 의무지출은 연평균 7.8%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270.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 5.0%에 비해 2.8%p 높은 수준으로 2018년 이후 정책변화가 반영될 경우 향후 의무지출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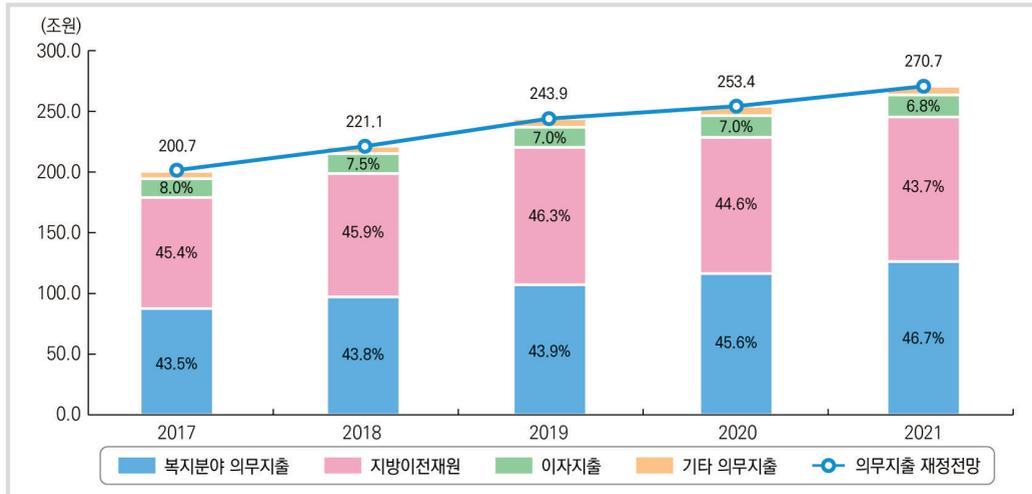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의무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양의무자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가입자 지원금 증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액 증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아동수당 제도 도입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림 8]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로 항목별 비중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이전재원의 비중은 2017년은 가장 높은 45.4%에서 2021년은 43.7%까지 낮아지는 반면에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은 2017년 43.5%에서 2021년 46.7%까지 증가하여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의무지출에서 기준선과의 차이는 2018년 4.2조원에서 2021년 14.9조원까지 커지면서 5년간 총 40.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아동수당 신규도입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30.2조원)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인한 지방이전재원 확대(7.4조원) 등에 기인한다.

〔표 1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200.7	221.1	243.9	253.4	270.7	1,189.7	7.8
복지분야 의무지출	87.4	96.8	107.2	115.6	126.4	533.4	9.7
지방이전재원	91.1	101.4	113.0	113.1	118.4	536.9	6.8
이자지출	16.1	16.5	17.0	17.6	18.3	85.5	3.2
기타 의무지출	6.0	6.4	6.8	7.2	7.6	33.9	5.8
NABO 기준선(B)	200.7	217.0	234.2	242.4	255.8	1,150.0	6.3
복지분야 의무지출	87.4	93.3	100.3	107.5	114.9	503.2	7.1
지방이전재원	91.1	101.0	110.3	110.9	116.2	529.6	6.3
이자지출	16.1	16.5	17.0	17.6	18.1	85.2	2.9
기타 의무지출	6.0	6.2	6.3	6.4	6.6	31.5	2.1
차 이(A-B)	-	4.2	10.1	11.0	14.9	40.3	1.5
복지분야 의무지출	-	3.6	7.0	8.1	11.5	30.2	2.6
지방이전재원	-	0.4	2.7	2.2	2.2	7.4	0.5
이자지출	-	-	-	0.1	0.2	0.3	0.3
기타 의무지출	-	0.2	0.5	0.7	1.0	2.4	3.7

(1) 복지분야 의무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7년 87.4조원에서 2021년 126.4조원으로 연평균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지출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서, 전체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7.8%를 1.9%p 상회한다.

기준선과 대비하면 복지분야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9.7%)이 기준선(7.1%)을 2.6%p 상회함에 따라 5년간 총 30.2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10.3%), 고용보험(11.7%), 기초연금(15.1%), 아동수당(24.0%) 등이 견인하고 있다.

[표 14]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항 목	세부내역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의무지출(합계)		87.4	96.8	107.2	115.6	126.4	9.7
(전년 대비 증가율)			(10.7)	(10.7)	(7.8)	(9.4)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10.0	10.5	12.0	12.8	14.1	8.9
사회보험	건강보험지원	6.9	7.3	9.0	9.5	10.2	10.3
	건강보험(공교부담금)	0.7	0.8	0.9	1.0	1.1	10.8
	고용보험	6.3	7.6	8.7	9.4	9.8	11.7
	산재보험	4.4	5.1	5.5	5.9	6.2	8.7
	소 계	18.3	20.8	24.1	25.8	27.3	10.4
공적연금	국민연금	18.9	20.4	22.0	24.5	27.2	9.5
	공무원연금	15.3	16.5	18.0	19.6	21.4	8.9
	사학연금	3.1	3.3	3.5	3.7	4.1	7.3
	군인연금	3.1	3.3	3.4	3.6	3.8	5.2
	소 계	40.3	43.5	46.9	51.4	56.5	8.8
노 인	기초연금	8.1	10.3	10.9	11.7	14.3	15.1
	노인장기요양보험	0.7	0.7	0.9	0.9	1.0	9.8
	소 계	8.8	11.0	11.8	12.7	15.3	14.7
보 훈		4.2	4.6	4.7	4.8	5.0	4.6
보육 및 장애인	영유아보육	3.2	3.2	3.2	3.2	3.3	0.8
	아동수당	-	1.1	2.2	2.1	2.1	24.0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4.2
	장애인연금	0.6	0.7	0.7	0.8	0.8	8.3
	소 계	3.8	5.0	6.1	6.2	6.3	13.2
기타 복지지출		1.9	1.5	1.6	1.8	2.0	1.0

주: 복지분야 의무지출 = 공공부조+사회보험+공적연금+노인+보육 및 장애인+기타 복지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 중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 또는 정책변화로 인해 NABO 전망과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재정전망 결과 및 기준선과의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의 전망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부문 중 보건복지부 소관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사업이 해당된다.

각 항목에 대해 전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2017년 10.0조원에서 2021년 14.1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여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는 2018년 0.3조원, 2019년 1.3조원, 2020년 1.6조원, 2021년 2.7조원 등 2017~2021년간 총 5.8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생활보장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17~'21	'12~'16
NABO 재정전망(A)	10.0	10.5	12.0	12.8	14.1	59.4	8.9	6.9
NABO 기준선(B)	10.0	10.2	10.6	11.2	11.4	53.6	3.3	
차 이(A-B)	-	0.3	1.3	1.6	2.7	5.8	5.6	

이와 같은 기준선과의 차이는 재정전망 시 가정한 정책변화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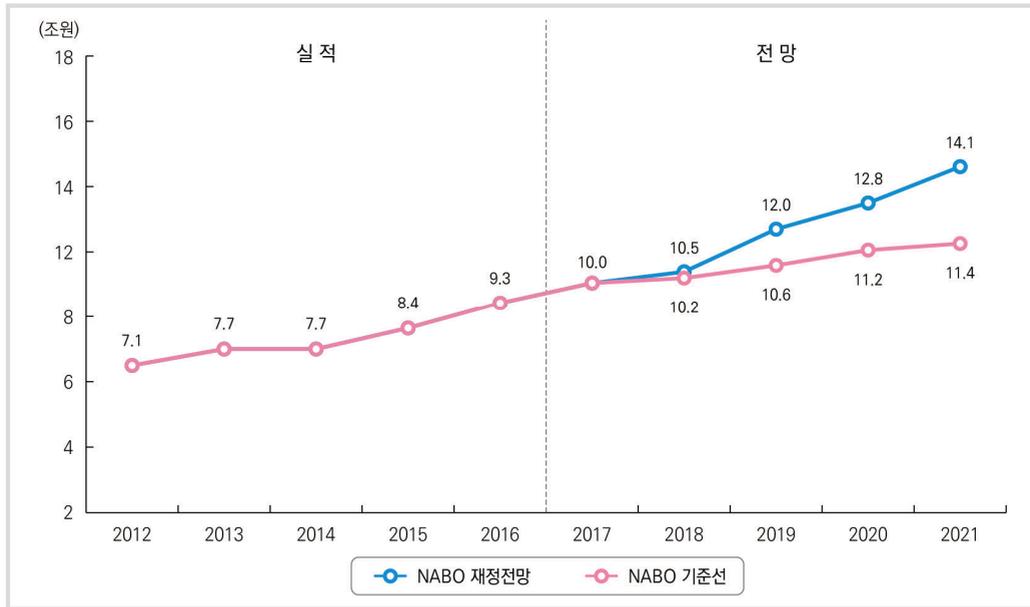
첫째,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¹⁰⁾ 중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중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둘째,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가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할 계획이며, 주거급여의 수급가구 소득기준은 2018년 중위소득 43%에서 2019년 44%로, 2020년 4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10) 단,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한다.

셋째,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를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지급(2018년 50~70% → 2020년 100%)할 계획이다.

[그림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생활보장



■ 건강보험지원

건강보험지원은 일반회계 지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2017년 6.9조원에서 2021년 10.2조원으로 연평균 10.3%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선과 비교하면, 향후 5년간 추가 재정소요는 2019년 0.1조원, 2020년 0.3조원, 2021년 0.4조원 등 5년간 총 0.8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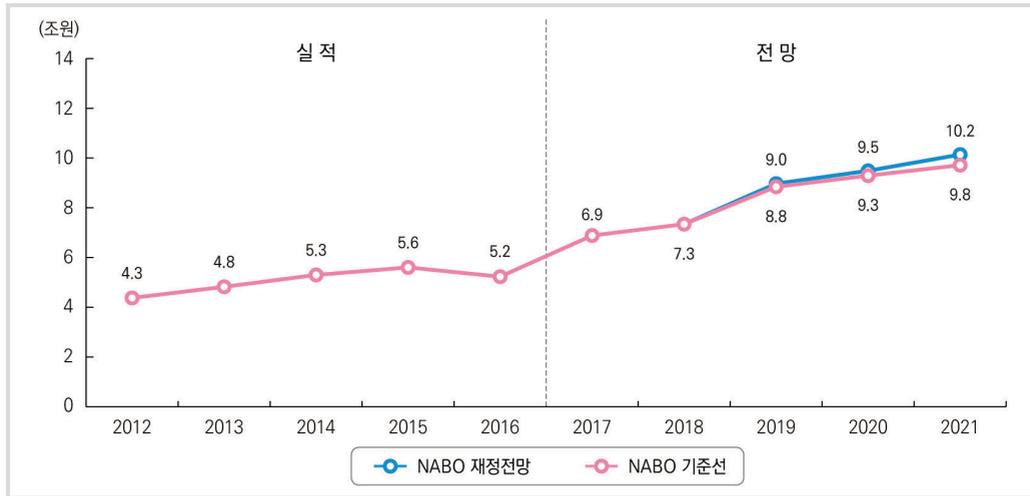
[표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지원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17~'21	'12~'16
NABO 재정전망(A)	6.9	7.3	9.0	9.5	10.2	42.8	10.3	4.6
NABO 기준선(B)	6.9	7.3	8.8	9.3	9.8	42.1	9.1	
차 이(A-B)	-	-	0.1	0.3	0.4	0.8	1.1	

기준선과의 차이(5년간 총 0.8조원)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 8. 9.)의 효과에 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지원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에 정부의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기준선의 평균인상률(1.32%)보다 높은 3.0% 인상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지원



■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사업목적 및 보험료 부담주체에 따라 실업급여계정, 자영업자 실업급여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4개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4개 계정 중 의무지출인 실업급여계정의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 3개 세부사업의 8개 세사업,¹¹⁾ 자영업자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사업」(세부사업) 중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1개 세부사업을 전망 대상으로 하였다.

전망 결과,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2017년 6.3조원에서 2021년 9.8조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함으로써 기준선 대비 추가 지출소요는 2019년 0.5조원, 2020년 0.6조원, 2021년 0.6조원 등 5년간 총 1.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 「구직급여」는 「(순수)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의 3개 세사업,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의 2개 세사업,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사산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의 4개 세사업으로 각각 구성된다.

[표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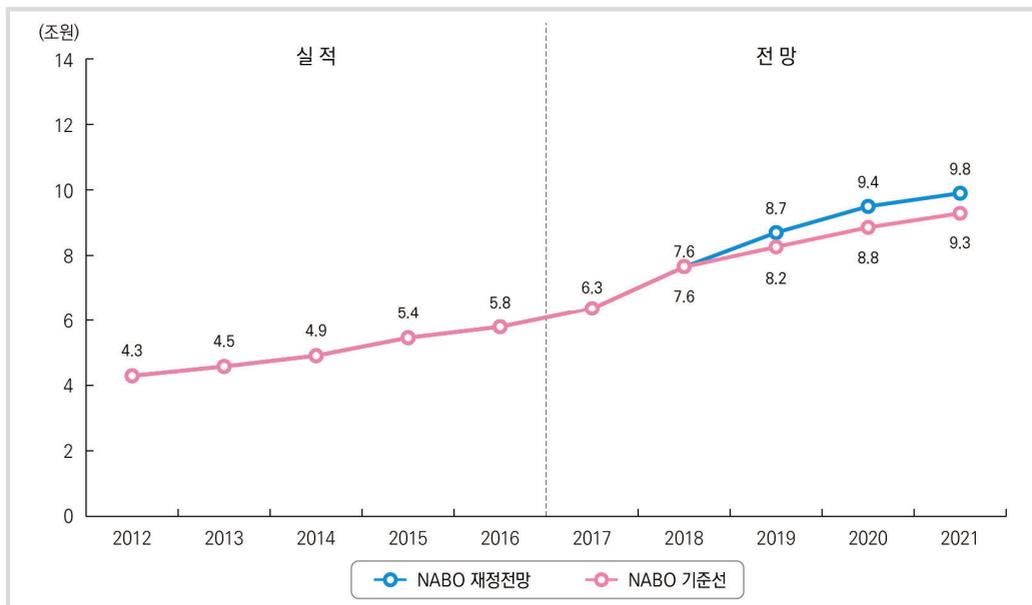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17~'21	'12~'16
NABO 재정전망(A)	6.3	7.6	8.7	9.4	9.8	41.9	11.7	7.8
NABO 기준선(B)	6.3	7.6	8.2	8.8	9.3	40.2	10.0	
차 이(A-B)	-	-	0.5	0.6	0.6	1.7	1.7	

이와 같은 기준선과의 차이는 정책변화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재정전망 시 가정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급여는 현행 90일~240일인 소정급여일수가 2019년부터 30일씩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육아휴직급여는 2018년 하반기부터 '아빠의 달' 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일괄 인상되고, 2019년부터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단가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월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한액이 인상(현행 월 150만원에서 2018년 월 160만원)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급여 기준금액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금



■ 산재보험기금

정부는 산재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지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¹²⁾

전망 결과, 산재보험 지출은 2017년 4.4조원에서 2021년 6.2조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함으로써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지출 소요는 2018년 0.3조원, 2019년 0.5조원, 2020년 0.5조원, 2021년 0.6조원 등 5년간 총 1.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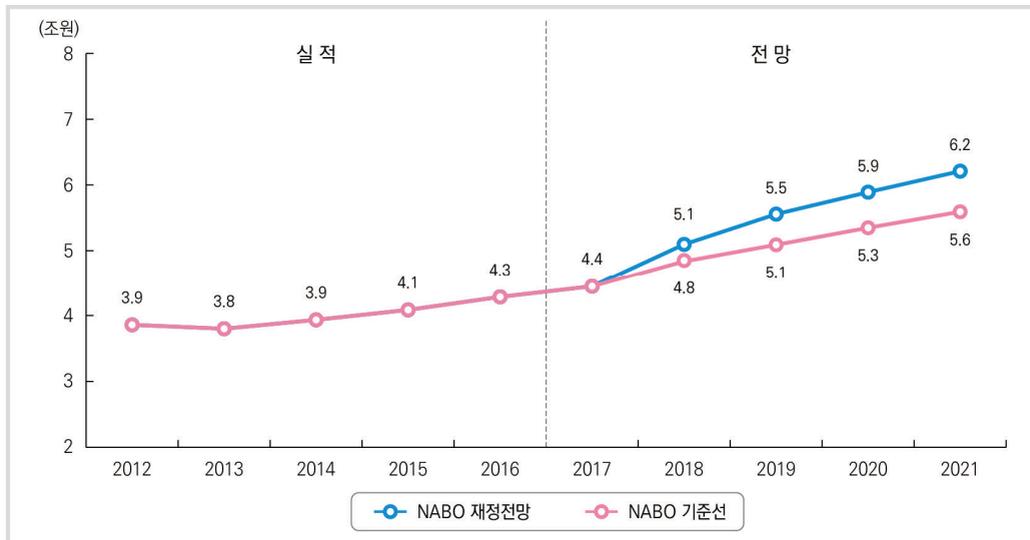
【표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산재보험기금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17~'21	'12~'16
NABO 재정전망(A)	4.4	5.1	5.5	5.9	6.2	27.2	8.7	2.7
NABO 기준선(B)	4.4	4.8	5.1	5.3	5.6	25.3	6.0	
차 이(A-B)	-	0.3	0.5	0.5	0.6	1.9	2.7	

이와 같은 기준선과의 차이는 재정전망에 반영된 정책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요 정책 변화로는 자동차·도보 등 통상적 경로를 통한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림 1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산재보험기금



12) 산재보험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연금 등 총 9개 급여로 구성된다.

■ 기초연금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하여 국가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이며, 2017년 기준연금액은 월 206,050원이다.

전망 결과, 기초연금 지급액은 2017년 8.1조원에서 2021년 14.3조원으로 연평균 15.1% 증가함으로써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지출 소요는 2018년 1.7조원, 2019년 1.8조원, 2020년 1.9조원, 2021년 3.8조원 등 5년간 총 9.1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1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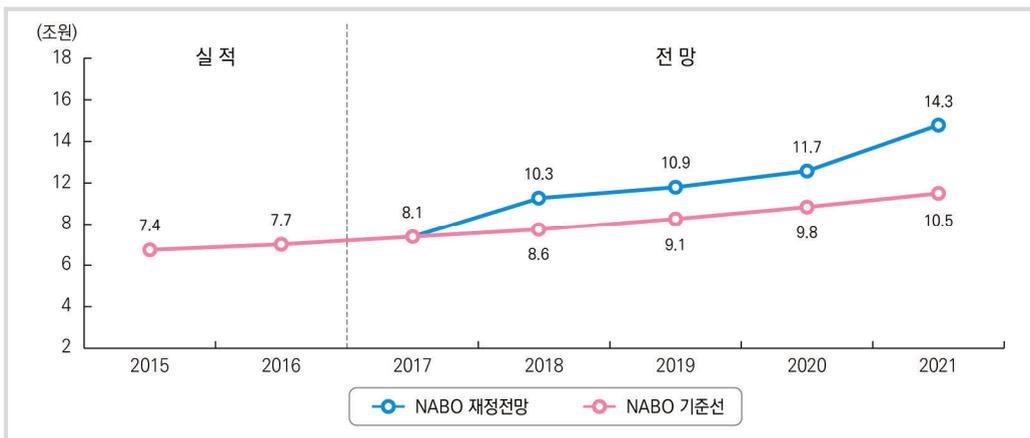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17~'21	'15~'16
NABO 재정전망(A)	8.1	10.3	10.9	11.7	14.3	55.4	15.1	4.1
NABO 기준선(B)	8.1	8.6	9.1	9.8	10.5	46.2	6.7	
차 이(A-B)	-	1.7	1.8	1.9	3.8	9.1	8.4	

주: 기초연금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교를 위해 2015~2016년 연평균증가율(결산) 적용

이와 같은 기준선과의 차이는 재정전망에 반영된 정책변화에 따른 것인데, 전망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되, 매 5년마다 해당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에서는 기준연금액을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단서 조항에 의해 2018년 월 25만원, 2021년은 월 30만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1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 아동수당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국회에 「아동수당법안」을 제출(2017.9.28.)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예산을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아동수당법안」 외에도 관련 법률안¹³⁾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며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지출로 분류하였다.

정부 계획대로 아동수당이 2018년부터 7월부터 도입·시행될 경우 2018년 1.1조원, 2021년 2.1조원 등 2017~2021년간 총 7.5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⁴⁾

[표 20] 「NABO 재정전망」: 아동수당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	1.1	2.2	2.1	2.1	7.5	24.0

■ 장애인연금

정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전망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2017년 0.6조원에서 2021년 0.8조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함으로써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는 2018년 0.1조원, 2019년 0.09조원, 2020년 0.16조원, 2021년 0.15조원 등 5년간 총 0.5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0.56	0.67	0.68	0.76	0.77	3.4	8.3
NABO 기준선(B)	0.56	0.57	0.59	0.60	0.62	2.9	2.5
차 이(A-B)	-	0.10	0.09	0.16	0.15	0.5	5.8

13) 전혜숙, 윤소하, 김승희, 김광수,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부겸,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4) 아동수당 제도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기준선과의 차이는 없다.

기준선과의 차이는 전망기간 동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18년 월 25만원, 2021년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의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같이 인상된다.¹⁵⁾

■ 보훈부문

본 전망에서는 보훈분야 의무지출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급과 2급 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6.25자녀수당·무공영예수당·사망일시금 및 보철구지급 등 7개의 기타사업을 추계하였다.

전망 결과, 보훈분야 의무지출은 2017년 4.2조원에서 2021년 5.0조원으로 5년간 연평균 4.6% 증가함으로써 기준선 대비 2018년 0.3조원, 2019년 0.2조원, 2020년 0.2조원, 2021년 0.2조원 등 5년간 총 0.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보훈부문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4.2	4.6	4.7	4.8	5.0	23.3	4.6
NABO 기준선(B)	4.2	4.3	4.5	4.7	4.8	22.5	3.7
차 이(A-B)	-	0.3	0.2	0.2	0.2	0.8	0.8

기준선과의 차이는 정책변화의 효과에 기인하는 데, 전망 시 가정한 보훈분야의 주요 정책 변화는 정부 계획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상금 인상,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비 조정 및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의 인상 등이 있다.

첫째, 보상금은 2018년 5%, 2019년 3.5%, 2020년 3.0% 및 2021년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비의 경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무공영예수당은 훈격별 (인헌)280~(태극)300천원에서 훈격별 (인헌)360~(태극)380천원으로 8만원 인상되며,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하였다.

15) 「장애인연금법」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2)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연동되어 지방에 배분되며,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¹⁶⁾로 구성된다.

전망 결과, 지방이전재원은 2017년 91.1조원에서 2021년 118.4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는 2018년 0.4조원, 2019년 2.7조원, 2020년 2.2조원, 2021년 2.2조원 등 5년간 총 7.4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기준선과의 차이는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에 의한 것으로,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와 교육세, 담뭏값 개별소비세 등 총수입과 연동되어 결정되는데, 정부의 세계개편안으로 인해 향후 세입이 증가할 경우 지방이전재원도 증가하게 된다.¹⁷⁾

[표 2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91.1	101.4	113.0	113.1	118.4	536.9	6.8
NABO 기준선(B)	91.1	101.0	110.3	110.9	116.2	529.5	6.3
차 이(A-B)	-	0.4	2.7	2.2	2.2	7.4	0.5

(3)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권 이자, 국민주택기금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자, 우체예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기타 이자지출로 구성된다.

전망 결과, 2017년 16.1조원에서 2021년 18.3조원으로 연평균 3.2%씩 증가함으로써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는 2020년 0.1조원, 2021년 0.2조원 등 5년간 총 0.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지출에서 기준선과의 차이는 관리재정수지 전망에서 기준선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관리재정수지 전망에서는 2017년부터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당해 연도 국가채무에 반영되고 이듬해 2018년부터 이자지출¹⁸⁾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2019년까지) 특별회계로서, 2017년은 누리과정 예산의 78%를 교육세(전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를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 이후 2018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할 계획이다.

17)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의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전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년한시)로 전입한다.

[표 2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6.1	16.5	17.0	17.6	18.3	85.5	3.2
NABO 기준선(B)	16.1	16.5	17.0	17.6	18.1	85.2	2.9
차 이(A-B)	-	-	-	0.1	0.2	0.3	0.3

(4)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2017년 6.0조원에서 2021년 7.6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는 2018년 0.2조원, 2019년 0.5조원, 2020년 0.7조원, 2021년 1.0조원 등 5년간 총 2.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 대비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은 전망 시 가정한 연평균 증가율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기준선 전망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가정한 반면, NABO 전망에서는 6년(2012~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 5.8%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표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6.0	6.4	6.8	7.2	7.6	33.9	5.8
NABO 기준선(B)	6.0	6.2	6.3	6.4	6.6	31.5	2.1
차 이(A-B)	-	0.2	0.5	0.7	1.0	2.4	3.7

다.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17년 209.0조원(GDP 대비 12.2%)에서 2021년 238.7조원(GDP 대비 11.6%)으로 연평균 3.4%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량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51.0%에서 2021년 47.0%로 2017년 이후 5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표 11] 참조).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과거 5년(2012~2016년)간 연평균 증가율(4.2%)보다는 0.8%p 낮아질 전망이다.

재량지출을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동 기간 45.0조원(재량지출 대비 21.5%)에서 50.9조원(재량지출 대비 21.3%)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

18) 국고채금리(3년)를 곱한 금액을 이자지출로 보며, 이 때, 3년만기 국고채금리는 NABO의 전망치를 적용하였다.

이다. 과거 5년간 경직성 경비의 연평균 증가율(5.1%)과 비교하면 2.0%p 낮은 수준으로 증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10만명 순증 등으로 인건비는 연평균 7.1%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이 연 3.1%에 그친 것은 기본경비 등이 연평균 11.9%씩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경직성이 강한 국방비의 경우 동 기간 36.3조원(재량지출 대비 17.4%)에서 45.8조원(재량지출 대비 19.2%)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4.2%)과 비교하면 1.8%p 증가세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직성 경비와 국방비를 제외한 비경직성 경비의 경우 동 기간 127.7조원(재량지출 대비 61.1%)에서 142.0조원(재량지출 대비 59.5%)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 5년간 비경직성 경비의 연평균 증가율(3.9%)과 비교하면 1.2%p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재량지출 중 비경직성 경비의 비중도 2018년부터 6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표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총량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재량지출 ¹⁾	209.0 (12.2)	209.9 (11.7)	217.9 (11.6)	228.0 (11.6)	238.7 (11.6)	3.4	4.2
경직성 경비 ²⁾	45.0 (21.5)	45.6 (21.7)	46.7 (21.4)	48.9 (21.4)	50.9 (21.3)	3.1	5.1
인건비 ³⁾	33.4 (74.2)	35.8 (78.5)	38.3 (82.0)	41.0 (83.9)	43.9 (86.3)	7.1	
기본경비 등 ³⁾	11.6 (25.8)	9.8 (21.5)	8.4 (18.0)	7.9 (16.1)	7.0 (13.7)	-11.9	
국방비 ²⁾	36.3 (17.4)	39.0 (18.6)	41.0 (18.8)	43.3 (19.0)	45.8 (19.2)	6.0	4.2
비경직성 경비 ²⁾	127.7 (61.1)	125.3 (59.7)	130.2 (59.7)	135.9 (59.6)	142.0 (59.5)	2.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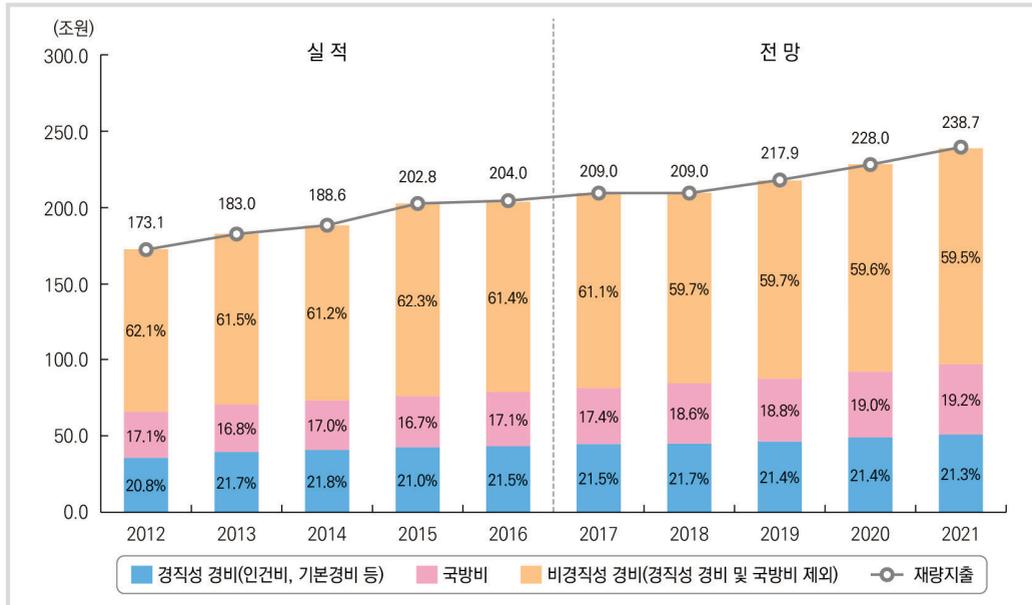
주: 1)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2) () 안은 재량지출 대비 비중임

3) () 안은 경직성 경비 대비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15] 성질별 재량지출 추이: 2012~2021년



주: 1. 2016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17년부터는 전망치임
 2. 경직성 경비와 국방비, 비경직성 경비의 각 값들은 재량지출 대비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재량지출을 기준선과 비교하면, 2018년에는 3.1조원 적지만, 2019년부터는 기준선을 상회하여 2017~2021년간 총 14.6조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기준선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NABO 재정전망은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연평균 증가율 3.4%¹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지만, 기준선 전망에서는 NABO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전망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2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209.0	209.9	217.9	228.0	238.7	1,103.6	3.4
NABO 기준선(B)	209.0	213.0	217.5	222.3	227.2	1,089.0	2.1
차 이(A-B)	-	-3.1	0.4	5.8	11.6	14.6	1.3

19)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아동수당을 재량지출로 분류하여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4.3%로 제시하고 있다. 본 전망에서는 아동수당을 의무지출로 분류함으로써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이다.

3. 재정수지

가. 개 관

재정수지 전망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19.7조원, 2021년 3.9조원 등 전망기간(2017~2021년) 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비율도 2017년 1.2%에서 2021년 0.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22.0조원에서 2021년 -48.1조원으로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며, 그에 따라 GDP 대비 비율도 2017년 -1.3%에서 2021년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GDP 대비 비율)	(25.1)	(25.0)	(25.2)	(25.1)	(25.0)
총지출	409.7	431.0	461.7	481.5	509.4
(GDP 대비 비율)	(23.9)	(24.1)	(24.6)	(24.5)	(24.8)
통합재정수지	19.7	16.6	9.9	9.9	3.9
(GDP 대비 비율)	(1.2)	(0.9)	(0.5)	(0.5)	(0.2)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1.7	45.4	48.8	50.7	52.0
(GDP 대비 비율)	(2.4)	(2.5)	(2.6)	(2.6)	(2.5)
관리재정수지	-22.0	-28.8	-39.0	-40.8	-48.1
(GDP 대비 비율)	(-1.3)	(-1.6)	(-2.1)	(-2.1)	(-2.3)

나.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전망기간(2017~2021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에서의 큰 폭의 흑자(2017년 41.7조원에서 2021년 52.0조원)가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내내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2017년 19.7조원(GDP 대비 1.2%)에서 2021년 3.9조원(GDP 대비 0.2%)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흑자 규모의 지속적 감소는 총수입이 2017년 429.4조원에서 2021년 513.3조원으로 증가(연평균 5.1%)하는 것에 비해 동 기간 총지출이 409.7조원에서 509.4조원으로 더 빠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5.6%)함에 기인한다.

기준선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19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2.8조원 기준선보다 높고, 2019년에는 -1.0조원 낮으나 2020년에는 -7.8조원, 2021년 -17.2조원으로 기준선과의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18년 기준선보다 0.1%p 높았지만 2019년 -0.1%p, 2020년 -0.4%p, 2021년 -0.8%p로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준선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전망기간 동안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총 32.4조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기준선 대비 총 54.9조원 증가함으로써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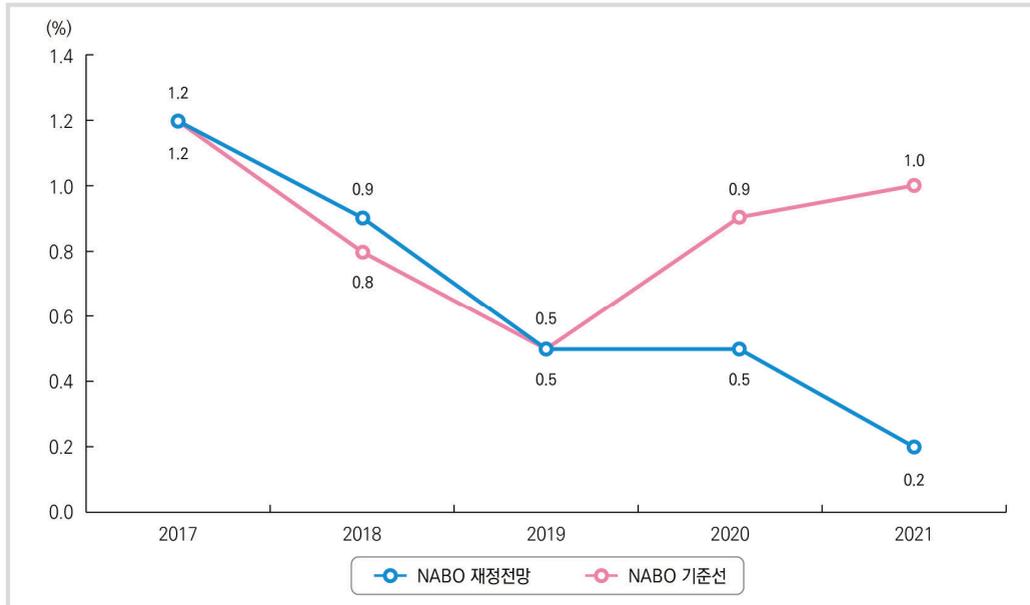
[표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29.4 (25.1)	447.6 (25.0)	471.6 (25.2)	491.4 (25.1)	513.3 (25.0)	4.6
	총지출	409.7 (23.9)	431.0 (24.1)	461.7 (24.6)	481.5 (24.5)	509.4 (24.8)	5.7
	통합재정수지	19.7 (1.2)	16.6 (0.9)	9.9 (0.5)	9.9 (0.5)	3.9 (0.2)	
NABO 기준선 (B)	총수입	429.4 (25.1)	443.7 (24.8)	461.5 (24.6)	482.3 (24.6)	503.9 (24.6)	4.1
	총지출	409.7 (23.9)	429.9 (24.1)	451.3 (24.1)	464.7 (23.7)	482.9 (23.5)	4.2
	통합재정수지	19.7 (1.2)	13.8 (0.8)	10.3 (0.5)	17.7 (0.9)	21.0 (1.0)	
차 이 (A-B)	총수입	-	3.9	10.1	9.0	9.4	0.5
	총지출	-	1.1	10.5	16.8	26.5	1.5
	통합재정수지	-	2.8	-0.4	-7.8	-17.2	

주: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그림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다.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17년 -22.0조원에서 2021년 -48.1조원으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도 2017년 -1.3%에서 2021년 GDP 대비 -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적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 증가(연평균 증가율 4.1%)보다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증가(연평균 증가율 5.4%)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기준선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이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2.8조원, 2020년에는 -10.2조원, 2021년 -19.8조원으로 기준선과의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8년까지는 동일하나 2019년부터는 그 격차가 2019년 -0.2%p, 2020년 -0.5%p, 2021년 -0.9%p로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준선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전망기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제외한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총 18.7조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기준선 대비 총 51.3조원으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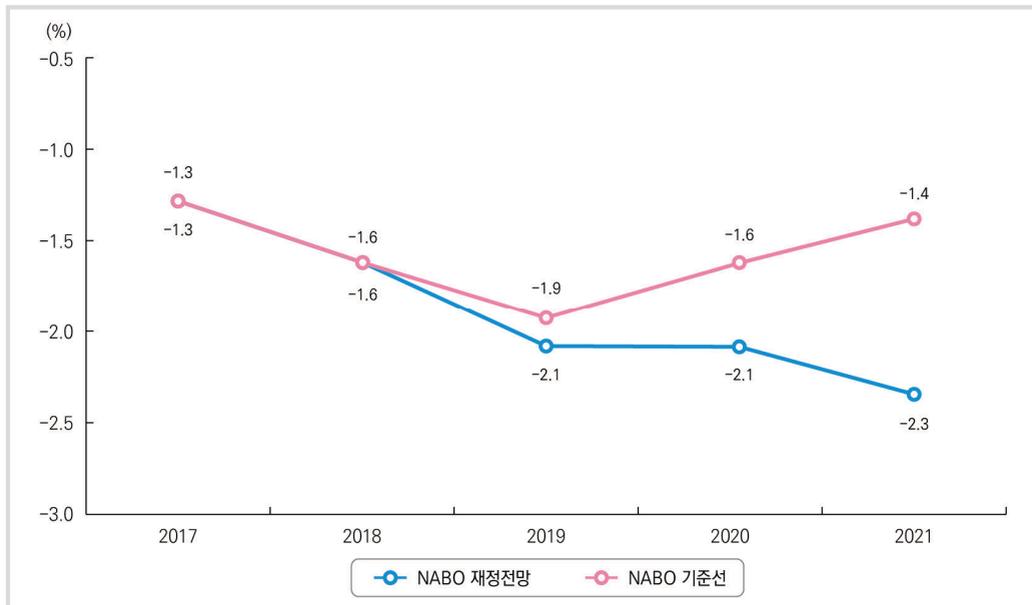
【표 3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¹⁾	348.6 (20.4)	359.5 (20.1)	377.9 (20.2)	391.9 (20.0)	408.6 (19.9)	4.1
	총지출 ²⁾	370.5 (21.6)	388.3 (21.7)	416.9 (22.3)	432.8 (22.1)	456.7 (22.3)	5.4
	관리재정수지	-22.0 (-1.3)	-28.8 (-1.6)	-39.0 (-2.1)	-40.8 (-2.1)	-48.1 (-2.3)	
NABO 기준선 (B)	총수입 ¹⁾	348.6 (20.4)	358.5 (20.1)	371.2 (19.8)	386.5 (19.7)	403.0 (19.7)	3.7
	총지출 ²⁾	370.5 (21.6)	387.5 (21.7)	407.4 (21.8)	417.1 (21.3)	431.3 (21.0)	3.9
	관리재정수지	-22.0 (-1.3)	-29.0 (-1.6)	-36.2 (-1.9)	-30.7 (-1.6)	-28.3 (-1.4)	
차 이 (A-B)	총수입 ¹⁾	-	1.0	6.7	5.5	5.6	0.4
	총지출 ²⁾	-	0.8	9.5	15.6	25.3	1.5
	관리재정수지	-	0.1	-2.8	-10.2	-19.8	

주: 1) 총수입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2) 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1.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그림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7년 41.7조원에서 2021년 52.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중은 5년간 평균 2.5%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동 기간 80.8조원(GDP 대비 4.7%)에서 104.7조원(GDP 대비 5.1%)으로 연평균 6.7% 증가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동 기간 39.2조원(GDP 대비 2.3%)에서 52.7조원(GDP 대비 2.6%)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비록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6.7%)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7.7%)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 규모가 지출 규모에 비해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수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은 과거 5년(2012~2016)의 연평균 증가율(4.9%)보다 1.8%p 높은 6.7%씩 증가함으로써 전망기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안정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1】 「NABO 재정전망」: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수입 (GDP 대비 비율)	80.8 (4.7)	88.2 (4.9)	93.7 (5.0)	99.4 (5.1)	104.7 (5.1)	6.7	4.9
지출 (GDP 대비 비율)	39.2 (2.3)	42.7 (2.4)	44.8 (2.4)	48.7 (2.5)	52.7 (2.6)	7.7	7.9
수지 (GDP 대비 비율)	41.7 (2.4)	45.4 (2.5)	48.8 (2.6)	50.7 (2.6)	52.0 (2.5)	5.7	2.5

사회보장성기금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17년 이후 2018년부터 적용될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준선과의 차이는 없다. 그에 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상향조정이나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 수지는 2017년 38.8조원(GDP 대비 2.3%)에서 2021년 46.0조원(GDP 대비 2.2%)으로 전망기간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가입자 수 증가 및 기준소득 월액 상승으로 2017년 58.4조원에서 2021년 74.0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지출은 2017년 19.6조원에서 2021년 28.0조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같은 기간 지출이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다. 그 결과 수지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6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15~60세) 중 주요 가입연령인 20~60세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7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수입이 지출보다 약 3배 정도 크기 때문이다.

[표 32] 「NABO 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58.4 (3.4)	61.5 (3.4)	66.2 (3.5)	70.3 (3.6)	74.0 (3.6)	6.1
지출 (GDP 대비 비율)	19.6 (1.1)	21.1 (1.2)	22.7 (1.2)	25.2 (1.3)	28.0 (1.4)	9.3
수지 (GDP 대비 비율)	38.8 (2.3)	40.4 (2.3)	43.5 (2.3)	45.1 (2.3)	46.0 (2.2)	4.4

사학연금기금 수지는 2017년 0.8조원(GDP 대비 0.05%)에서 2021년 0.8조원(GDP 대비 0.04%)으로 전망기간 총 3.9조원 수지 증가가 예상된다. 기금 수입은 가입자 수 증가 및 기준소득월액 상승으로 2017년 5.3조원에서 2021년 6.1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지출은 4.5조원(GDP 대비 0.3%)에서 5.3조원(GDP 대비 0.3%)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사학연금기금의 기여금 수입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한 기여금 부담률 상승효과가 지속되어 2017~2020년까지 기여금 수입은 연평균 6.3%씩 증가하지만, 2021년 기여금 부담률이 2020년의 9%로 고정되면서 기여금 수입의 연평균 증가률이 3.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33] 「NABO 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5.3 (0.3)	5.5 (0.3)	5.1 (0.3)	5.7 (0.3)	6.1 (0.3)	3.6
지출 (GDP 대비 비율)	4.5 (0.3)	4.4 (0.2)	4.7 (0.2)	5.0 (0.3)	5.3 (0.3)	4.2
수지 (GDP 대비 비율)	0.8 (0.05)	1.1 (0.06)	0.5 (0.03)	0.7 (0.04)	0.8 (0.04)	0.5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7년 0.3조원(GDP 대비 0.02%)에서 2021년 3.1조원(GDP 대비 0.15%)으로 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 등에 따라 2017년 10.0조원에서 2021년 15.1조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연장, 육아휴직 월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 인상 등으로 2017년 9.8조원(GDP 대비 0.6%)에서 2021년 12.6조원(GDP 대비 0.6%)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수입이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지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제정의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인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상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표 34] 「NABO 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10.0 (0.6)	13.2 (0.7)	14.0 (0.7)	14.8 (0.8)	15.7 (0.8)	11.9
지출 (GDP 대비 비율)	9.8 (0.6)	11.1 (0.6)	11.3 (0.6)	12.1 (0.6)	12.6 (0.6)	6.7
수지 (GDP 대비 비율)	0.3 (0.02)	2.0 (0.11)	2.7 (0.15)	2.8 (0.14)	3.1 (0.15)	86.2

산재보험기금 수지의 흑자규모는 2017년 1.8조원(GDP 대비 0.1%)에서 2021년 2.0조원(GDP 대비 0.1%)으로 연평균 2.7% 증가하여 5년간 총 10.1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산재보험기금의 수입은 적용근로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2017년 1.7조원에서 2021년 8.9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기금의 지출은 자가용·도보 출퇴근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2017년 5.3조원(GDP 대비 0.3%)에서 2021년 6.8조원(GDP 대비 0.3%)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표 35] 「NABO 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7.1 (0.4)	8.0 (0.4)	8.3 (0.4)	8.6 (0.4)	8.9 (0.4)	5.6
지출 (GDP 대비 비율)	5.3 (0.3)	6.0 (0.3)	6.2 (0.3)	6.5 (0.3)	6.8 (0.3)	6.6
수지 (GDP 대비 비율)	1.8 (0.1)	2.0 (0.1)	2.2 (0.1)	2.1 (0.1)	2.0 (0.1)	2.7

4. 국가채무

가. 개 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7년 659.9조원(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40.7조원(GDP 대비 41.0%)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2017년 626.6조원(GDP 대비 36.6%)에서 2021년 810.6조원(GDP 대비 39.5%)으로 연평균 6.6% 증가하는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²⁰⁾는 2017년 33.4조원(GDP 대비 1.9%)에서 2021년 30.1조원(GDP 대비 1.5%)으로 연평균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총량표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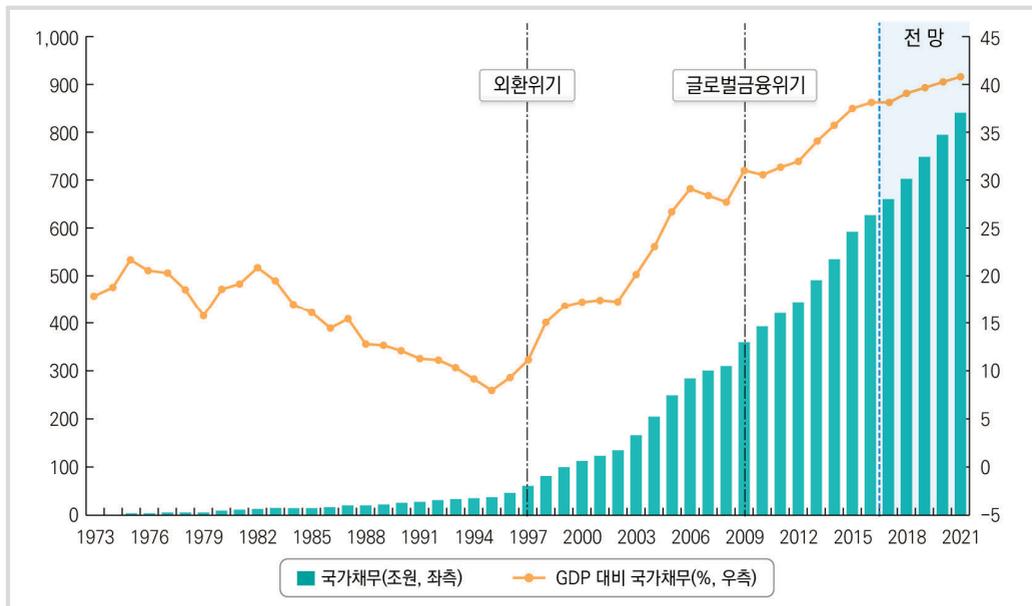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97~'16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59.9 (38.5)	702.2 (39.3)	748.3 (39.9)	794.6 (40.5)	840.7 (41.0)	6.2	9.1	13.1
- 중앙정부 (GDP 대비 비율)	626.6 (36.6)	669.1 (37.4)	716.0 (38.2)	763.8 (38.9)	810.6 (39.5)	6.6	8.6	13.8
- 지방정부 순채무 (GDP 대비 비율)	33.4 (1.9)	33.1 (1.9)	32.3 (1.7)	30.9 (1.6)	30.1 (1.5)	-2.6	18.3	6.9

20) 지방정부 순채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전망치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지난 5년(2012~201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9.1%, 지난 20년(1997~201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3.1%에 비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6.2%)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18]에서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18.4%) 보다 GDP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22.1%)가 빨랐기 때문이다. 반면, 1994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국가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18]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1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2017. 10. 24.

기준선 대비 국가채무는 2017년은 현행 정책이 유지되고 정책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으나, 2018년은 기준선보다 0.1조원 낮게 전망되었다. 이후부터는 2019년 2.6조원(GDP 대비 0.1%p), 2020년 12.8조원(GDP 대비 0.6%p), 2021년 32.6조원(GDP 대비 1.6%p) 등 기준선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이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기준선(39.4%) 보다 1.6%p 높은 4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준선과의 차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망기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입과 지출을 각각 제외한 총지출 증가(5년간 연평균 5.4% 증가)가 총수입 증가(5년간 연평균 4.1%)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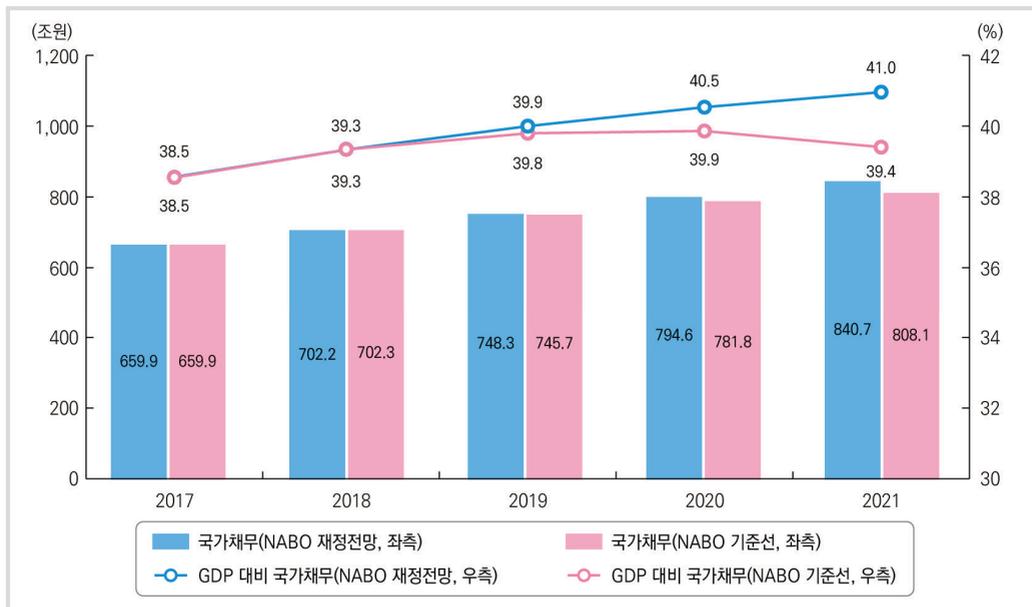
[표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율
NABO 재정전망(A)	659.9 (38.5)	702.2 (39.3)	748.3 (39.9)	794.6 (40.5)	840.7 (41.0)	6.2
NABO 기준선(B)	659.9 (38.5)	702.3 (39.3)	745.7 (39.8)	781.8 (39.9)	808.1 (39.4)	5.2
차 이(A-B)	-	-0.1	2.6	12.8	32.6	1.0

주: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그림 1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나. 중앙정부 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2017년 626.6조원(GDP 대비 36.6%)에서 2021년 810.6조원(GDP 대비 39.5%)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44.3조원(GDP 대비 20.1%)에서 2021년 489.2조원(GDP 대비 23.8%)으로 연평균 9.2% 증가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²¹⁾는 2017년 282.2조원(GDP 대비 16.5%)에서 2021년 321.4조원(GDP 대비 15.7%)으로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8] 「NABO 재정전망」: 중앙정부 채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중앙정부 (GDP 대비 비율)	626.6 (36.6)	669.1 (37.4)	716.0 (38.2)	763.8 (38.9)	810.6 (39.5)	6.6	8.6
- 적자성 채무 (GDP 대비 비율)	344.3 (20.1)	372.2 (20.8)	408.2 (21.8)	446.0 (22.7)	489.2 (23.8)	9.2	12.6
- 금융성 채무 (GDP 대비 비율)	282.2 (16.5)	296.9 (16.6)	307.9 (16.4)	317.7 (16.2)	321.4 (15.7)	3.3	4.6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9.2%로 높게 나타난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전망기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총지출 증가(5년간 연평균 5.4% 증가)가 총수입 증가(5년간 연평균 4.1%)보다 빠른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다. 지방정부 채무

본 전망에서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간의 지방정부 순채무는 연평균 -2.6%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1997~2016년)의 지방 순채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9.9조원(GDP 대비 1.9%)에서 2016년 35.2조원(GDP 대비 2.1%)으로 연평균 6.9% 증가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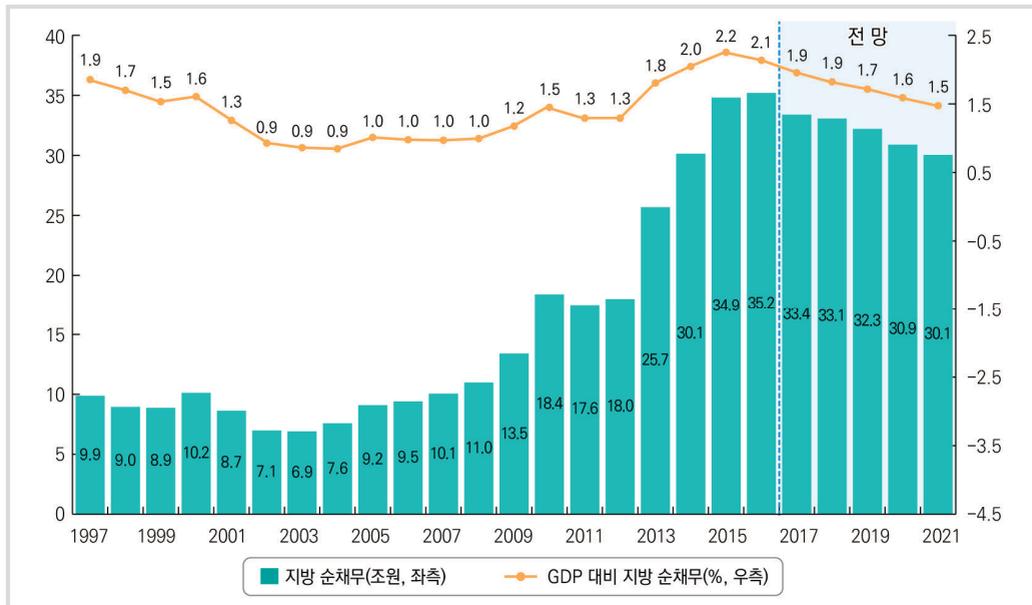
21) 금융성 채무는 주택기금을 비롯하여 외환평형기금, 재정용자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융자 등 향후 회수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로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9]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정부 순채무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7~'21	'12~'16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59.9 (38.5)	702.2 (39.3)	748.3 (39.9)	794.6 (40.5)	840.7 (41.0)	6.2	9.1
- 지방정부 순채무 (GDP 대비 비율)	33.4 (1.9)	33.1 (1.9)	32.3 (1.7)	30.9 (1.6)	30.1 (1.5)	-2.6	6.9

[그림 20] 지방정부 순채무 추이: 1997~2021년



Ⅲ.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1.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으로, 지난 9월 1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상 GDP성장률을 올해는 4.6%로 전망하였고, 2018년에는 다소 하락한 4.5%, 2019년부터는 4.9%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치는 NABO 전망과 비교하면 2018년 이후는 높은 수준이다.

〔표 4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국가재정운용계획	4.6	4.5	4.9	4.9	4.9	4.8
NABO 재정전망	4.6	4.4	4.8	4.7	4.6	4.6

자료: 1. 기획재정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9.

2.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7.10.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 서민 일자리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총지출을 전년(추경 기준) 대비 5.7% 증가한 429.0조원으로 편성하였다.²²⁾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량지출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11.5조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입은 법인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7% 증가한 447.1조원을 편성하였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총수입은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연평균 증가율 5.0%²³⁾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22) 이는 2018년 정부의 경상GDP성장률 전망치(4.5%)보다 0.6%p 높은 수준이다.

23) 2017년 추경예산 기준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0%이며, 2017년 본예산 적용 시 연평균 증가율은 5.5%가 된다.

총지출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지출의 증가속도를 경상GDP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5.1%(2017년은 추경 기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의 경우 2017년보다 소폭 개선된 GDP 대비 -1.6% 수준이나, 2019년 이후부터는 총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총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GDP 대비 -2.1%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정부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선제적 투자 등으로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부터 소폭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 40.3%, 2021년에는 4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지표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총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0
(전년 대비 증가율)	(5.9)	(8.1)	(5.7)	(5.4)	(4.4)	(4.4)	
총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1
(전년 대비 증가율)	(3.6)	(6.1)	(4.6)	(5.7)	(5.2)	(5.1)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33.0	-38.4	-44.3	
(GDP 대비 비율)	(-1.7)	(-1.7)	(-1.6)	(-1.8)	(-2.0)	(-2.1)	
통합재정수지	13.7	13.0	18.1	18.0	15.3	12.5	
(GDP 대비 비율)	(0.8)	(0.8)	(1.0)	(1.0)	(0.8)	(0.6)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49.1	793.0	835.2	5.8
(GDP 대비 비율)	(40.4)	(39.7)	(39.6)	(39.9)	(40.3)	(40.4)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추경기준임

2. 2017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본예산 기준이며, 2018년은 2017년 추경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NABO 전망과의 비교

가. 개 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수입은 2017년 추경 기준 423.1조원(GDP 대비 8.1%)에서 2021년 513.5조원(GDP 대비 4.4%)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NABO 전망(연평균 4.6%)에 비해 0.4%p 높게 전망하였으나, 전망기간(2017~2021년) 동안 총수입은 NABO 예상 수입액

보다 6.1조원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은 2017년 410.1조원에서 2021년 500.9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년간 총지출은 NABO의 총지출 전망보다 총 23.3조원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2017년 -29.0조원(GDP 대비 -1.7%)에서 2021년 -44.3조원(GDP 대비 -2.1%)으로 -2% 내외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는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2.0조원(GDP 대비 -1.3%)에서 -48.1조원(GDP 대비 -2.3%)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는 2017년 666.9조원(GDP 대비 38.9%)에서 2021년 835.2조원(GDP 대비 40.4%)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는 2017년 659.9조원(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40.7조원(GDP 대비 41.0%)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량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 계획(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23.1 (24.7)	447.1 (25.0)	471.4 (25.1)	492.0 (25.0)	513.5 (24.9)	5.0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10.1 (23.9)	429.0 (24.0)	453.3 (24.1)	476.7 (24.2)	500.9 (24.2)	5.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28.9 (-1.7)	-28.6 (-1.6)	-33.0 (-1.8)	-38.4 (-2.0)	-44.3 (-2.1)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66.9 (38.9)	708.9 (39.6)	749.1 (39.9)	793.0 (40.3)	835.2 (40.4)	5.8
NABO 재정전망(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29.4 (25.1)	447.6 (25.0)	471.6 (25.2)	491.4 (25.1)	513.3 (25.0)	4.6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09.7 (23.9)	431.0 (24.1)	461.7 (24.6)	481.5 (24.5)	509.4 (24.8)	5.7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22.0 (-1.3)	-28.8 (-1.6)	-39.0 (-2.1)	-40.8 (-2.1)	-48.1 (-2.3)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59.9 (38.5)	702.2 (39.3)	748.3 (39.9)	794.6 (40.5)	840.7 (41.0)	6.2
차 이 (A-B)	총수입	-6.3	-0.5	-0.2	0.7	0.3	0.4
	총지출	0.4	-2.0	-8.4	-4.8	-8.5	-0.5
	관리재정수지	-7.1	0.2	6.0	2.5	3.9	
	국가채무	6.9	6.7	0.8	-1.6	-5.5	-0.4

나. 총수입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0%)을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4.6%)에 비해 0.4%p 높게 전망하였으나, 전망기간(2017~2021년) 동안 총수입은 NABO 예상 수입액보다 6.1조원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항목별로는 국세수입에서 21.2조원 적게 전망한 반면, 국세외수입에서는 15.1조원 많게 전망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2017년 국세수입을 NABO가 높게 전망한 것에 기인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상GDP 성장률을 NABO 전망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음에도 전망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두 기관 간 세수추계 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4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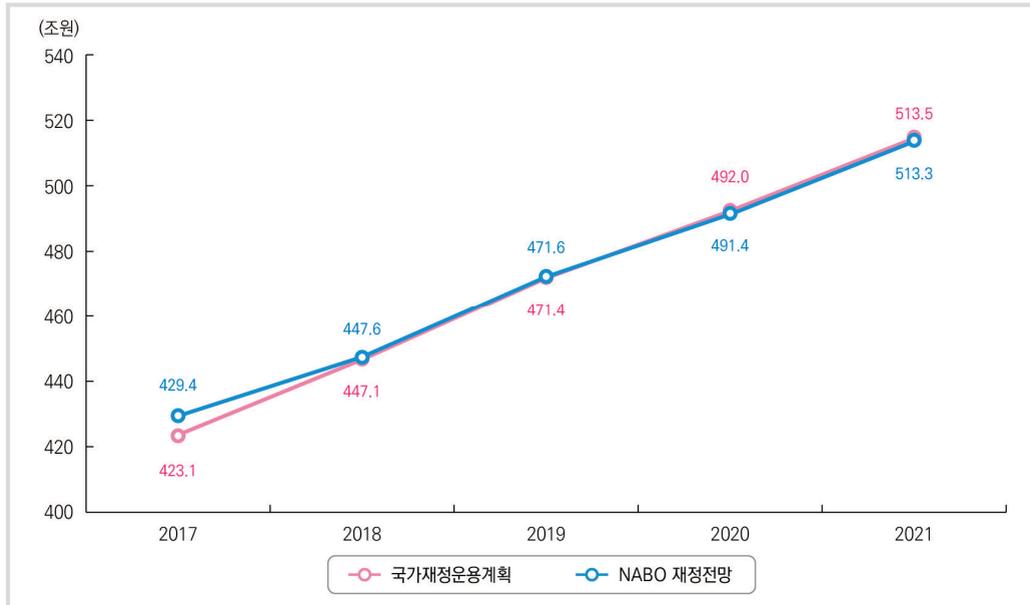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평균
국가재정 운용계획 (A)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2,347.1	(5.0)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1,422.9	(5.8)
	국세외수입	172.0	178.9	183.8	191.0	198.5	924.2	(3.6)
	경상GDP성장률	4.6	4.5	4.9	4.9	4.9	-	4.8
	국세탄성치	0.74	1.51	1.47	0.96	0.94	-	1.12
NABO 재정전망 (B)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2,353.3	(4.6)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1,444.2	(5.1)
	국세외수입	169.0	175.5	181.0	188.0	195.6	909.1	(3.7)
	경상GDP성장률	4.6	4.4	4.8	4.7	4.6	-	(4.6)
	국세탄성치	1.61	1.04	1.40	0.94	1.03	-	1.17
차 이 (A-B)	총수입	-6.3	-0.5	-0.2	0.6	0.3	-6.1	0.4
	국세수입	-9.3	-3.9	-3.0	-2.4	-2.7	-21.2	0.7
	국세외수입	3.0	3.4	2.8	3.0	2.9	15.1	-0.1
	경상GDP성장률	-	0.1	0.1	0.2	0.3	-	-
	국세탄성치	-0.87	0.47	0.07	0.02	-0.09	-	-

주: 1. 증가율/평균 부분의 ()는 연평균 증가율이며, 국세탄성치와 경상GDP성장률은 평균값임

2. 국세탄성치는 국세증가율을 경상GDP성장률로 나눈 값임

[그림 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수입



국세수입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251.1조원에서 2021년 315.0조원으로 연평균 5.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NABO 전망은 2017년 260.4조원에서 2021년 317.7조원으로 연평균 5.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전망의 국세수입 차이는 2017년 -9.3조원에서 2021년 -2.7조원 수준으로 축소되어 5년간 누적 -21.2조원의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172.0조원에서 2021년 198.5조원으로 연평균 3.6%의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NABO 전망은 2017년 169.0조원에서 2021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 계획과 NABO 전망의 국세외수입 차이는 2018년 3.4조원에서 이후 평균 2.9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여 5년간 누적 15.1조원의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표 4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차이 원인: 총수입

대 상	주요원인
총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전망: 2017~2021년간 NABO가 정부보다 매년 경상GDP성장률을 0.1~0.3%p 낮게 전망(연평균 기준 0.2%p)

다. 총지출

(1) 개 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1%)을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5.6%)에 비해 0.5%p 낮게 전망함에 따라 전망기간(2017~2021년) 동안 총지출은 NABO의 총지출 전망보다 23.3조원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의무지출에서 전액 발생 하였는데,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에서 발생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6.9%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NABO는 이보다 0.9%p 높은 7.8%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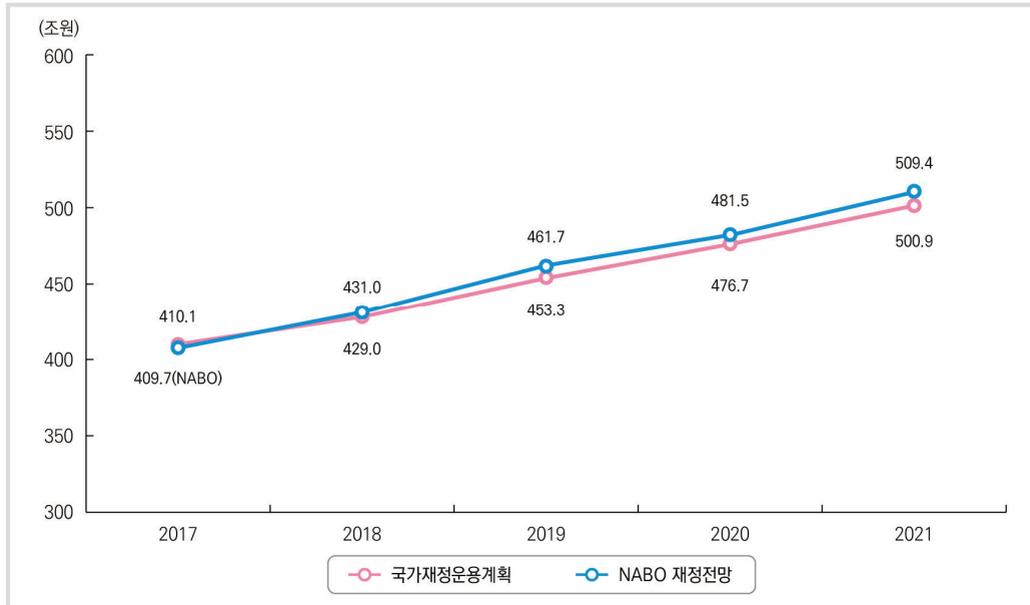
[표 4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총지출	410.1	429.0	453.3	476.7	500.9	2,270.0	5.1
- 의무지출	201.1	219.0	235.5	248.7	262.2	1,166.4	6.9
- 재량지출	209.0	209.9	217.9	228.0	238.7	1,103.6	3.4
NABO 재정전망(B)							
총지출	409.7	431.0	461.7	481.5	509.4	2,293.3	5.6
- 의무지출	200.7	221.1	243.9	253.4	270.7	1,189.7	7.8
- 재량지출	209.0	209.9	217.9	228.0	238.7	1,103.6	3.4
차 이 (A-B)							
총지출	0.4	-2.0	-8.4	-4.8	-8.5	-23.3	-0.5
- 의무지출	0.4	-2.0	-8.4	-4.8	-8.5	-23.3	-0.9
- 재량지출	-	-	-	-	-	-	-

주: 아동수당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NABO 전망과의 비교를 위해 의무지출로 재분류 함

[그림 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총지출



(2) 의무지출 항목별 차이

정부 계획과 NABO 전망과의 의무지출 차이(-23.3조원)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10.8조원)과 지방이전재원(-9.2조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201.1	219.0	235.5	248.7	262.2	1,166.4	6.9
NABO 재정전망(B)	200.7	221.1	243.9	253.4	270.7	1,189.7	7.8
차 이(A-B)	0.4	-2.0	-8.4	-4.8	-8.5	-23.3	-
[지출항목별 차이]							
복지분야 의무지출	0.4	-	-1.9	-3.5	-5.8	-10.8	
지방이전재원	-	-2.0	-6.0	-0.4	-0.8	-9.2	
이자지출	-	0.2	0.1	-0.1	-0.6	-0.4	
기타 의무지출	-	-0.3	-0.6	-0.7	-1.3	-2.9	
의무지출 차이 합계	0.4	-2.0	-8.4	-4.8	-8.5	-23.3	

■ 복지분야 의무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기초생활보장(-3.4조원), 건강보험(-4.0조원), 고용보험(-1조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NABO와 정부간의 거시경제 변수, 수급자 수, 보험료율, 급여인상률 등의 전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9.6조원에서 2021년 12.7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1%)으로,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8.9%)에 비해 5년간 총 3.4조원 하회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 규모, 급여 단가에 적용한 상승률 등에 있어서 NABO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²⁴⁾은 2017년 6.9조원에서 2021년 10.2조원(연평균 증가율 6.2%) 수준으로,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10.3%)에 비해 5년간 총 4.0조원 하회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NABO의 전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17. 8. 9.)로 인해 증가하게 될 건강보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과거(3년 평균 1.32%)에 비해 높을 것(3.0%)이라 가정하였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과거의 평균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고용보험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6.3조원에서 2021년 9.8조원(연평균 증가율 9.0%) 수준으로,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11.7%)에 비해 5년간 총 1.0조원 하회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NABO의 수급자 수 전망이 정부의 수급자 수 전망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NABO 전망이 더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9년 이후는 NABO 전망에 적용한 급여단가의 상승률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급여단가의 상승률보다 상회함에 따라 NABO 전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법률 제6619호) 제2항에 따라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표 47]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87.8	96.8	105.3	112.0	120.6	522.6	8.3
NABO 재정전망(B)	87.4	96.8	107.2	115.6	126.4	533.4	9.7
차 이(A-B)	0.4	-	-1.9	-3.5	-5.8	-10.8	-1.4
[세부항목별 차이]							
항목	세부내역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공공부조(a)	기초생활보장	-0.44	-0.12	-0.57	-0.80	-1.46	-3.39
사회보험(b)	건강보험지원	-	-	-1.26	-1.35	-1.42	-4.03
	건강보험(공교부담금)	-	-	-0.09	-0.13	-0.17	-0.39
	고용보험	0.21	0.01	-0.10	-0.51	-0.60	-0.99
	산재보험	0.01	-0.07	-0.47	-0.17	-0.03	-0.73
	소 계	0.22	-0.06	-1.91	-2.16	-2.22	-6.14
공적연금(c)	국민연금	0.60	0.73	0.52	-0.18	-1.42	0.25
	공무원연금	0.25	0.20	0.07	-0.12	0.02	0.41
	사학연금	-0.09	-0.23	-0.04	-0.01	-0.03	-0.39
	군인연금	-0.02	-0.05	-0.08	-0.11	-0.15	-0.41
	소 계	0.73	0.66	0.47	-0.42	-1.58	-0.14
노 인(d)	기초연금	-0.03	-0.45	0.23	0.16	-0.09	-0.18
	노인장기요양보험	-	-	-0.07	-0.06	-0.05	-0.18
	소 계	-0.03	-0.45	0.17	0.10	-0.15	-0.36
보 훈(e)		-	0.03	0.01	-0.06	-0.17	-0.19
보육 및 장애인(f)	영유아보육	-0.06	0.01	-0.02	-0.07	-0.13	-0.28
	아동수당	-	-0.01	-0.02	-0.01	-0.01	-0.04
	장애수당(기초)	-	-0.01	-0.01	-0.01	-0.01	-0.04
	장애인연금	-	-0.04	-0.03	-0.10	-0.05	-0.22
	소 계	-0.06	-0.05	-0.07	-0.20	-0.21	-0.59
기타 복지지출(g)		-	-	-	-	-	-
차이 합계 (a+b+c+d+e+f+g)		0.41	0.01	-1.91	-3.54	-5.79	-10.81

[표 4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차이 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

대 상	주요 요인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전망방법의 차이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 전망 차이 (보험료를 인상 적용 시 NABO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이 과거 평균에 비해 높을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 전망방법의 차이(수급자 수, 급여단가 상승률 전망 차이)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전망방법의 차이(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 단가)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물가상승률) 대상자 수 추정 시 수급률 반영 여부의 차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 전망 차이로 인해 발생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55%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²⁵⁾)
영유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별 대상자 수 전망 차이 보육료 인상 단가 전망 차이

■ 지방이전재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91.1조원에서 2021년 117.5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NABO 전망에서는 2017년 91.1조원에서 2021년 118.4조원까지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6.8%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전망의 차이는 2017년 2조원, 2019년 6조원, 2020년 0.4조원, 2021년 0.8조원 등 2017~2021년간 총 9.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차이의 주요 원인은 지방이전재원을 추계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담뱃값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NABO 재정전망」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전망 차이로 인한 것이다. 특히, NABO 전망에서는 2017년에 국세수입의 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약 4.7조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2017년 발생한 결손액(-4.7조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2019년에 정산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2019년에 지방이전재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5)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에 따라 국가는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표 49]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91.1	99.4	107.0	112.6	117.5	527.6	6.6
NABO 재정전망(B)	91.1	101.4	113.0	113.1	118.4	536.9	6.8
차 이(A-B)	-	-2.0	-6.0	-0.4	-0.8	-9.2	-0.2

■ 이자지출

이자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16.1조원에서 2021년 17.7조원으로 연평균 2.4%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NABO 전망은 2017년 16.1조원에서 2021년 18.3조원까지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전망의 차이는 2018년 0.2조원 증가하고, 2021년 0.6조원 감소하는 등 2017~2021년간 총 0.4조원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자율 및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전망 차이에 있다. NABO 전망의 경우 2017년부터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모두 당해년도 국가채무로 반영하며 이듬해부터 이자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신규 발행 국가채무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NABO의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전망을 적용하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신규 발행 국가채무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준금리 또는 조달금리(우체국특별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이자지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NABO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차이로 인해 신규발생 국가채무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이자지출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표 5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이자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16.1	16.7	17.0	17.6	17.7	85.1	2.4
NABO 재정전망(B)	16.1	16.5	17.0	17.6	18.3	85.5	3.2
차 이(A-B)	-	0.2	0.1	-0.1	-0.6	-0.4	-0.9

■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6.0조원에서 2021년 6.3조원으로 연평균 1.1%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NABO는 2017년 6.0조원에서 2021년 7.6조원 까지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5.8%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NABO 전망의 차이는 2018년 0.3조원, 2021년 1.3조원 등 2017~2021년간 총 2.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6.0	6.1	6.2	6.4	6.3	31.1	1.1
NABO 재정전망(B)	6.0	6.4	6.8	7.2	7.6	33.9	5.8
차 이(A-B)	-	-0.3	-0.6	-0.7	-1.3	-2.9	-4.7

[표 5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차이 원인: 복지 외 의무지출

대 상	주요 요인
지방이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담뭏값 개별소비세 전망 차이 • 결손분 인식 시점 차이
이자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등) • 이자지출 전망방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재정전망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액 및 동 채무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차이 등
기타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의무지출 상승률 전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는 과거 의무지출 평균 상승률 5.8%로 기타 의무지출 상승 가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기간동안 평균 1.1% 상승 가정

라. 재정수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13.0조원(GDP 대비 0.8%)에서 2021년 12.5조원(GDP 대비 0.6%)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NABO는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2017년 19.7조원(GDP 대비 1.2%)에서 2021년 3.9조원(GDP 대비 0.2%)으로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전망에 비해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2021년 8.7조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28.9조원(GDP 대비 -1.7%)에서 2021년 44.3조원(GDP 대비 -2.1%)으로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전망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7년 22.0조원(GDP 대비 -1.3%)에서 2021년 48.1조원(GDP 대비 -2.3%)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 계획과 NABO 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차이는 0.2조원(2018년)에서 3.8조원까지(2021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더 큰 이유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4.1%)은 NABO 전망에 비해 정부 계획이 0.3%p 더 높지만,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4%)은 정부 계획이 NABO 전망에 비해 -0.4%p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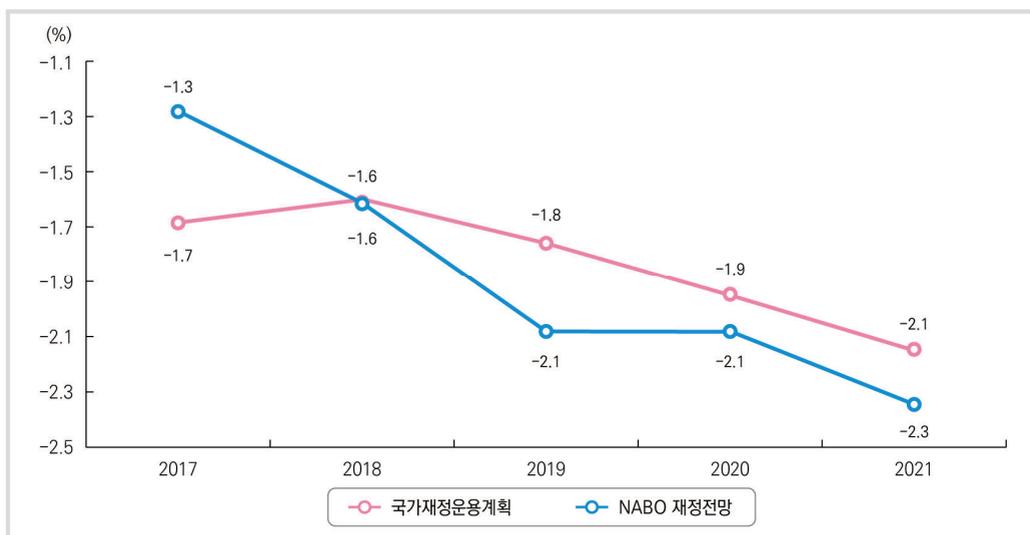
[표 5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재정 운용계획 (A)	통합재정수지	13.0 (0.8)	18.1 (1.0)	18.0 (1.0)	15.3 (0.8)	12.5 (0.6)
	관리재정수지	-28.9 (-1.7)	-28.6 (-1.6)	-33.0 (-1.8)	-38.4 (-1.9)	-44.3 (-2.1)
NABO 재정전망 (B)	통합재정수지	19.7 (1.2)	16.6 (0.9)	9.9 (0.5)	9.9 (0.5)	3.9 (0.2)
	관리재정수지	-22.0 (-1.3)	-28.8 (-1.6)	-39.0 (-2.1)	-40.8 (-2.1)	-48.1 (-2.3)
차 이 (A-B)	통합재정수지	-6.7	1.5	8.2	5.4	8.7
	관리재정수지	-6.9	0.2	5.9	2.4	3.8

주: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그림 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2017년 -29.0조원(GDP 대비 -1.7%)에서 2021년 -44.3조원(GDP 대비 -2.1%)으로 -2% 내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는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2.0조원(GDP 대비 -1.3%)에서 -48.1조원(GDP 대비 -2.3%)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42.0조원(GDP 대비 2.5%)에서 2021년 56.8조원(GDP 대비 2.7%)으로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비교하여 NABO는 2017년 41.7조원(GDP 대비 2.4%)에서 2021년 52.0조원(GDP 대비 2.4%)으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전망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차이는 0.3조원(2017년)에서 4.8조원(2021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계획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7.0%)를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6.7%)보다 높게 전망한 반면,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의 증가속도는 정부 계획(연평균 증가율 6.2%)에서 NABO 전망(연평균 증가율 7.7%)보다 낮게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표 5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 운용계획 (A)	총수입 ¹⁾	341.3 (19.9)	357.4 (20.0)	375.7 (20.0)	390.7 (19.8)	406.2 (19.7)	1,871.2	4.4
	총지출 ²⁾	370.3 (21.6)	385.9 (21.6)	408.7 (21.8)	429.0 (21.8)	450.4 (21.8)	2,044.4	5.0
	관리재정수지	-28.9 (-1.7)	-28.6 (-1.6)	-33.0 (-1.8)	-38.4 (-1.9)	-44.3 (-2.1)		
NABO 재정전망 (B)	총수입 ¹⁾	348.6 (20.4)	359.5 (20.1)	377.9 (20.2)	391.9 (20.0)	408.6 (19.9)	1,886.5	4.1
	총지출 ²⁾	370.5 (21.6)	388.3 (21.7)	416.9 (22.3)	432.8 (22.1)	456.7 (22.3)	2,065.2	5.4
	관리재정수지	-22.0 (-1.3)	-28.8 (-1.6)	-39.0 (-2.1)	-40.8 (-2.1)	-48.1 (-2.3)		
차 이 (A-B)	총수입 ¹⁾	-7.3	-2.1	-2.2	-1.3	-2.4	-15.3	0.3
	총지출 ²⁾	-0.2	-2.3	-8.2	-3.8	-6.2	-20.7	-0.4
	관리재정수지	-7.1	0.2	6.0	2.5	3.8		

주: 1) 총수입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2) 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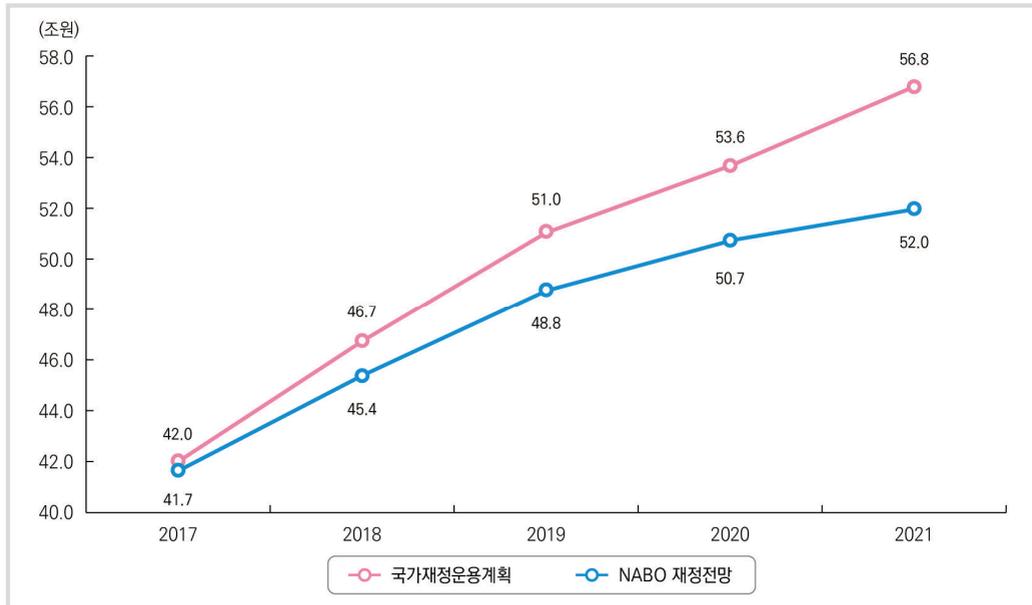
1.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표 5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 운용계획 (A)	수입	81.8	89.8	95.7	101.3	107.3	7.0
	지출	39.8	43.0	44.6	47.7	50.5	6.2
	수지	42.0	46.7	51.0	53.6	56.8	7.8
NABO 재정전망 (B)	수입	80.8	88.2	93.7	99.4	104.7	6.7
	지출	39.2	42.7	44.8	48.7	52.7	7.7
	수지	41.7	45.4	48.8	50.7	52.0	5.7
차이 (A-B)	수입	0.9	1.6	2.0	1.9	2.6	0.3
	지출	0.6	0.3	-0.2	-1.0	-2.2	-1.6
	수지	0.3	1.3	2.2	2.9	4.8	2.1

[그림 2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마. 국가채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가 2017년 666.9조원(GDP 대비 38.9%)에서 2021년 835.2조원(GDP 대비 40.4%)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NABO는 2017년 659.9조원(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40.7조원(GDP 대비 41.0%)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 계획과 비교하면, NABO 전망은 국가채무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부 계획보다

낮지만 격차가 줄어들면서 2020년부터는 정부 계획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과 NABO 전망의 국가채무 간의 차이는 2017년 6.9조원에서 2021년 -5.5조원이며, GDP 대비 비율로는 동 기간 0.4%p 차이에서 -0.6%p 차이로 정부 계획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차이 -0.4%p)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경상GDP 대비 40%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지만, NABO는 2021년에 4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복지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에서 정부 계획보다 23.3조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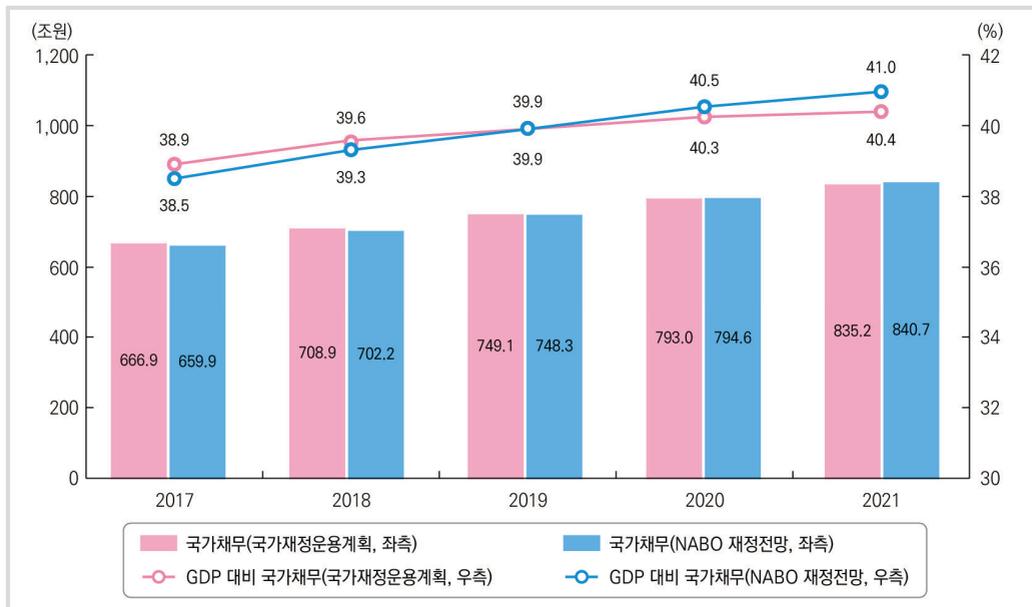
[표 5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666.9 (38.9)	708.9 (39.6)	749.1 (39.9)	793.0 (40.3)	835.2 (40.4)	5.8
NABO 재정전망(B)	659.9 (38.5)	702.2 (39.3)	748.3 (39.9)	794.6 (40.5)	840.7 (41.0)	6.2
차 이(A-B)	6.9	6.7	0.8	-1.6	-5.5	-0.4

주: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그림 2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부 록

「NABO 재정전망」: 총량표

(단위: 조원,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변수					
경상GDP성장률	4.6	4.4	4.8	4.7	4.6
실질GDP성장률	2.9	2.8	2.9	2.8	2.7
실업률	3.8	3.8	3.6	3.7	3.7
소비자물가	2.0	1.9	2.1	2.2	2.2
국고채금리(3년)	1.8	2.2	2.5	2.6	2.7
GDP 디플레이터	1.7	1.6	1.9	1.9	1.9
인구변수					
총 인구 증가율	0.4	0.4	0.3	0.3	0.3
합계출산율	1.2	1.2	1.2	1.2	1.3
출생률	8.0	8.0	7.9	7.9	7.9
사망률	5.7	5.9	6.1	6.2	6.4
0~5세 인구 비중	5.1	5.0	4.9	4.8	4.7
65세 이상 인구 비중	13.8	14.3	14.8	15.6	16.4
재정전망 총량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총지출	409.7	431.0	461.7	481.5	509.4
통합재정수지	19.7	16.6	9.9	9.9	3.9
관리재정수지	-22.0	-28.8	-39.0	-40.8	-48.1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1.7	45.4	48.8	50.7	52.0
국가채무	659.9	702.2	748.3	794.6	840.7

「NABO 재정전망」: 상세표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수입					
총수입	429.4	447.6	471.6	491.4	513.3
국세수입	260.4	272.1	290.6	303.4	317.7
국세외수입	169.0	175.5	181.0	188.0	195.6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0.8	88.2	93.7	99.4	104.7
총지출					
총지출	409.7	431.0	461.7	481.5	509.4
의무지출	200.7	221.1	243.9	253.4	270.7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39.2	42.7	44.8	48.7	52.7
복지분야 법정지출	87.4	96.8	107.2	115.6	126.4
국민기초생활보장	10.0	10.5	12.0	12.8	14.1
건강보험	7.6	8.1	9.8	10.5	11.2
4대 공적연금	40.3	43.5	46.9	51.4	56.5
노인부문	8.8	11.0	11.8	12.7	15.3
보훈부문	4.2	4.6	4.7	4.8	5.0
사회보험	10.8	12.7	14.3	15.3	16.0
보육 및 장애인	3.8	5.0	6.1	6.2	6.3
기타 복지지출	1.9	1.5	1.6	1.8	2.0
지방이전재원	91.1	101.4	113.0	113.1	118.4
이자지출	16.1	16.5	17.0	17.6	18.3
기타 의무지출	6.0	6.4	6.8	7.2	7.6
재량지출	209.0	209.9	217.9	228.0	238.7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19.7	16.6	9.9	9.9	3.9
	(1.2)	(0.9)	(0.5)	(0.5)	(0.2)
관리재정수지	-22.0	-28.8	-39.0	-40.8	-48.1
	(-1.3)	(-1.6)	(-2.1)	(-2.1)	(-2.3)
국가채무	659.9	702.2	748.3	794.6	840.7
	(38.5)	(39.3)	(39.9)	(40.5)	(41.0)

- 주: 1.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2. 사회보장성기금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3. 아동수당은 재량지출에서 제외하고 의무지출에 포함시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거시경제					
경상GDP성장률	4.6	4.5	4.9	4.9	4.9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총지출	410.1	429.0	453.3	476.7	500.9
통합재정수지	13.0	18.1	18.0	15.3	12.5
관리재정수지	-28.9	-28.6	-33.0	-38.4	-44.3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2.0	46.7	51.0	53.6	56.8
국가채무	666.9	708.9	749.1	793.0	835.2
총수입					
총수입	423.1	447.1	471.4	492.0	513.5
국세수입	251.1	268.2	287.6	301.0	315.0
국세외수입	172.0	178.9	183.8	191.0	198.5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1.8	89.8	95.7	101.3	107.3
총지출					
총지출	410.1	429.0	453.3	476.7	500.9
의무지출	201.1	219.0	235.5	248.7	262.2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39.8	43.0	44.6	47.7	50.5
복지분야 법정지출	87.4	96.8	107.2	115.6	126.4
국민기초생활보장	9.6	10.3	11.4	12.0	12.7
건강보험	7.6	8.1	8.5	9.0	9.6
4대 공적연금	41.1	44.1	47.4	51.0	54.9
노인부문	8.8	10.6	11.9	12.8	15.1
보훈부문	4.2	4.6	4.7	4.8	4.8
사회보험	11.0	12.6	13.7	14.6	15.4
보육 및 장애인	3.8	5.0	6.0	6.0	6.1
기타 복지지출	1.9	1.5	1.6	1.8	2.0
지방이전재원	91.1	99.4	107.0	112.6	117.5
이자지출	16.1	16.7	17.0	17.6	17.7
기타 의무지출	6.0	6.1	6.2	6.4	6.3
재량지출	209.0	209.9	217.9	228.0	238.7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13.0 (0.8)	18.1 (1.0)	18.0 (1.0)	15.3 (0.8)	12.5 (0.6)
관리재정수지	-28.9 (-1.7)	-28.6 (-1.6)	-33.0 (-1.8)	-38.4 (-1.9)	-44.3 (-2.1)
국가채무	666.9 (38.9)	708.9 (39.6)	749.1 (39.9)	793.0 (40.3)	835.2 (40.4)

- 주: 1.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2. 사회보장성기금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3. 아동수당은 재량지출에서 제외하고 의무지출에 포함시킴

「NABO 기준선」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준선 총량					
총수입	429.4	443.7	461.5	482.3	503.9
총지출	409.7	429.9	451.3	464.7	482.9
통합재정수지	19.7	13.8	10.3	17.7	21.0
관리재정수지	-22.0	-29.0	-36.2	-30.7	-28.3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1.7	42.7	46.5	48.3	49.4
국가채무	659.9	702.3	745.7	781.8	808.1
총수입					
총수입	429.4	443.7	461.5	482.3	503.9
국세수입	260.4	271.2	283.9	298.0	312.1
국세외수입	169.0	172.5	177.7	184.4	191.8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0.8	85.2	90.3	95.9	100.9
총지출					
총지출	409.7	430.0	451.7	464.7	482.9
의무지출	200.7	216.9	233.8	242.4	255.7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39.2	42.4	43.9	47.5	51.5
복지분야 법정지출	87.4	93.3	100.3	107.5	114.9
국민기초생활보장	10.0	10.2	10.6	11.2	11.4
건강보험	6.9	7.3	8.8	9.3	9.8
4대 공적연금	40.3	43.1	46.3	50.6	55.5
노인부문	8.8	9.3	10.0	10.7	11.5
보훈부문	4.2	4.3	4.5	4.7	4.8
사회보험	10.8	12.4	13.3	14.2	14.9
보육 및 장애인	3.8	3.8	3.9	3.9	4.0
기타 복지지출	1.9	1.9	1.9	2.0	2.0
지방이전재원	91.1	101.1	110.3	110.9	116.2
이자지출	16.1	16.5	17.0	17.6	18.1
기타 의무지출	6.0	6.2	6.3	6.4	6.6
재량지출	209.0	213.0	217.5	222.3	227.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19.7	13.8	10.3	17.7	21.0
	(1.1)	(0.8)	(0.6)	(0.9)	(1.0)
관리재정수지	-22.0	-29.0	-36.2	-30.7	-28.3
	(-1.3)	(-1.6)	(-1.9)	(-1.6)	(-1.4)
국가채무	659.9	702.3	745.7	781.8	808.1
	(38.5)	(39.3)	(39.8)	(39.9)	(39.4)

- 주: 1.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2. 사회보장성기금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3. 아동수당은 재량지출에서 제외하고 의무지출에 포함시킴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 발 간 일** 2017년 11월 2일
- 발 행 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6)
-

ISBN 978-89-6073-467-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

